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15
2014. 4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2014.3.1~3.31)

건축문화 부문

- 꿈꾸고 만들고 누리는 DDP
- 100가지 이야기 따라 한양도성을 즐기는 방법!
- 서울연구원, '메가시티의 삶과 행복서울' 국제세미나 개최 대구시
- 대구시,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 빛 공해를 넘어 '좋은 빛'으로...서울시 '좋은 세상'
- '미래 건축의 방향의 총아' DDP가 보여준다
- 제주 마을 안에 서서, 마을을 이야기 한다
-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의 가치와 가능성' 학술회의 개최
- 지역건축가와 '충남 건축의 미래' 함께 그린다
-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전' 열린다
- 안전한 부산만들기 본격 시동

녹색 건축·도시 부문

- 폭설, 폭풍,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 건축 추진!
- 인천시, 지자체 최초로 고유 설계VE 브랜드(BI) 구축
-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 위한 소셜픽션 상상잔치 참여하세요
- 서울시, 건물에서 새는 에너지 막는 효율화 사업에 150억 지원
- 경남도, 도심 속 힐링 공간 "생태놀이터"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최대 50세대까지' 완화
- 올해 소외계층 위한 녹색공간 10곳 만든다
-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이 앞장선다!
- 국토부 '건설 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가 양성' 본격화
- 해외건설, 이젠 국내에서 외국공무원들과 상담하세요!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 공모 실시
- 울산시 '2014년 옥외광고물 종합계획' 수립 추진
- 광주시, 마을공동체사업 종합계획 마련키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올해 우리 국토는 어떻게 변할까?'
- 충남 공공디자인 컨트롤타워 개소
- 인천 개항 창조문화도시(MWM City) 경제기반 구축 업무협약 체결
- 서울시, 지속가능 '마을기업' 본격 지원... 65개 선정
- 지역밀착형 창조일자리 프로젝트 도시재생 마을전문가에 도전하세요!
- 지역발전 거점으로 20개 중추도시권을 육성하고, 도시첨단산단 3곳, 노후 산단 재정비 지역 6곳을 선정
- 도내 6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특별발전 프로젝트 추진
- 광주시,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 지역 사업' 응모
- 충청남도, '광역도시계획 수립 주민의견 묻는다'
- 행복주택 공사장 가름막, 지역주민이 디자인 결정
- 우리 마을은 D11우리가 D8! 부산시, 산복도로에 국내 최초 방재(防災)공원 조성

APU Story 여덟 번째

김중업 박물관 Kim Chung Up Museum

(auri)

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

2014년 4월호 (통권 15호)

-
- 발 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 발행일 : 2014. 4. 30
 - 발행인 : 제해성
 - ISSN : 2288-274X
 - 편집·인쇄 : 알래스카인디고(주)
 - 기 획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동 706-1호
 - 연락처 : 031-478-9845
 - 이메일 : kslee@auri.re.kr(이경신)
-

| | |
|----------------------|---|
|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 5 이달의 정책 Highlights 6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
| <hr/> | |
| 건축문화 부문 | 8 꿈꾸고 만들고 누리는 DDP 9 100가지 이야기 따라 한양도성을 즐기는 방법! 10 서울研, '아시아 메가시티의 삶의 질과 행복서울' 국제세미나 개최 10 대구시,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11 빛 공해를 넘어 '좋은 빛'으로...서울시 '좋은빛상' 12 '미래 건축의 방향의 총아' DDP가 보여준다 13 제주 마을 안에 서서, 마을을 이야기 한다 14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의 가치와 가능성' 학술회의 개최 15 지역건축가와 '충남 건축의 미래' 함께 그린다 15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전' 열린다 16 안전한 부산만들기 본격 시동 |
| <hr/> | |
| 녹색건축·도시 부문 | 17 폭설, 폭풍,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 건축 추진! 17 인천시, 지자체 최초로 고유 설계VE 브랜드(BI) 구축 18 전국 건축물 총 6,851,802동 / 33억7천6백 만㎡ 18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 위한 소셜픽션 상상잔치 참여하세요 19 건설신기술 활용으로 공사비 절감하세요 19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 제작·배포 20 최초의 행복기숙사, '단국대 공공기숙사' 개관 21 서울시, 청계천 역사성·자연생태성 개선 본격화 21 울산시, 2014년 저탄소 에코아파트 만들기 사업 착수 22 건축물 에너지 절감 생활 속에서 느끼다 22 올해 '해외건설 전문 인력' 4천 명 양성 23 서울시, 건물에서 새는 에너지 막는 효율화 사업에 150억 지원 24 경남도, 도심 속 힐링 공간 '생태놀이터' 24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최대 50세대까지' 완화 25 올해 소외계층 위한 녹색공간 10곳 만든다 26 광주시, 2014년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 사업 추진 26 '생태경관 도시 울산'을 한눈에 27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이 앞장선다! 28 국토부 '건설 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가 양성' 본격화 29 해외건설, 이젠 국내에서 외국공무원들과 상담하세요! |
| <hr/> | |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30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 공모 실시 30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소·중규모 분할 개발 속도 낸다 31 울산시 '2014년 옥외광고물 종합계획' 수립 추진 |

- 32 전북형 생활권 사업 본격 추진한다!
- 32 2013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정보 활용건수 1억 건 넘어
- 33 광주시, 마을공동체사업 종합계획 마련키로
- 34 광주시, 도시경관 대대적 개선
- 3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 35 '올해 우리 국토는 어떻게 변할까?'
- 36 충남 공공디자인 컨트롤타워 개소
- 36 도심재생사업으로 새로운 변화 시도
- 37 인천 개항 창조문화도시(MWM City) 경제기반 구축 업무협약 체결
- 38 서울시, 지속가능 '마을기업' 본격 지원... 65개 선정
- 38 지역밀착형 창조일자리 프로젝트 도시재생 마을전문가에 도전하세요!
- 39 지역발전 거점으로 20개 중추도시권을 육성하고, 도시첨단산단 3곳,
노후 산단 재정비 지역 6곳을 선정
- 40 도내 6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 41 2014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실시
- 41 광주시,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 지역 사업' 응모
- 42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제도 개선 등 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추진
- 43 행복하고 희망을 나누는 마을 만들기
- 43 충청남도, '광역도시계획 수립 주민의견 묻는다'
- 43 2014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마을 육성사업 선정
- 44 부산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 45 행복주택 공사장 가름막, 지역주민이 디자인 결정
- 45 민간이 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을 완화
- 46 경북의 정체성 담은 건축 환경 조성한다
- 47 우리 마을은 D11우리가 D8! 부산시, 산복도로에 국내 최초 방재(防災)
공원 조성
- 47 행복주택 입주자, 지자체가 지역맞춤형으로 우선 선정
- 48 공원, 주택가 '범죄예방디자인' 서울 전역으로 확대
- 49 정부기관, 공간정보 활용 더 쉬워진다!
- 49 르완다 등 개도국 인프라 개발 종합계획 수립 지원
- 50 달혀있던 북한지도, 일반에 모습 드러내
- 50 울산시, 울산다운 건축문화 마련
- 51 대구시, '도시계획'을 시민과 함께 그린다!
- 52 행복도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방식 개선
- 52 하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대!

Highlights

건축문화 부문

2014년 3월에는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문화 부문'과 관련해 총 12건의 사업 및 시책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3월 23일 신진건축사 대상 「충남개발공사 복합 커뮤니티시설」 설계 공모를 발표했다. 이로써 국토교통부는 신진건축사들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5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업 및 시책을 발표하였으며, 그중 지난 3월 21일 개관한 동대문플라자(DDP)의 개관 행사 소식 및 관련 정보를 정리한 자료를 중점 발표하였다.

또한, 대구시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5일 '열린도시 재생 아카데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도시 부문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및 6개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 및 시책 21건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자연재해에 따른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 및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술연구원 등 9개 기관에서 '14년 총 4천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고 밝혔으며, '13년에 이어 '201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에 경기도청 제2별관 등 11개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서울시 등 12개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 및 시책 36건을 발표하였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지역 밀착형 창조일자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부산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제안에 의해 국내 최초로 '방재공원'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방재공원은 소화전과 소화활동에 필요한 비상소화장치함을 갖춰 비상시 방재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올해 마을 공동체사업에 255개 마을이 공모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거워짐에 따라 마을공동체사업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청에서는 디자인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디자인을 통해 아름답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충남 공공디자인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7일 개소식을 갖았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과 노년층이 참여 가능한 사업성 높은 마을기업 65개를 선정해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2014년 3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건축·도시 관련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해 해당 주체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69건의 발표자료 중 중앙부처에서 26건(37.7%), 지방자치단체에서 43건(62.3%)의 정책 사업이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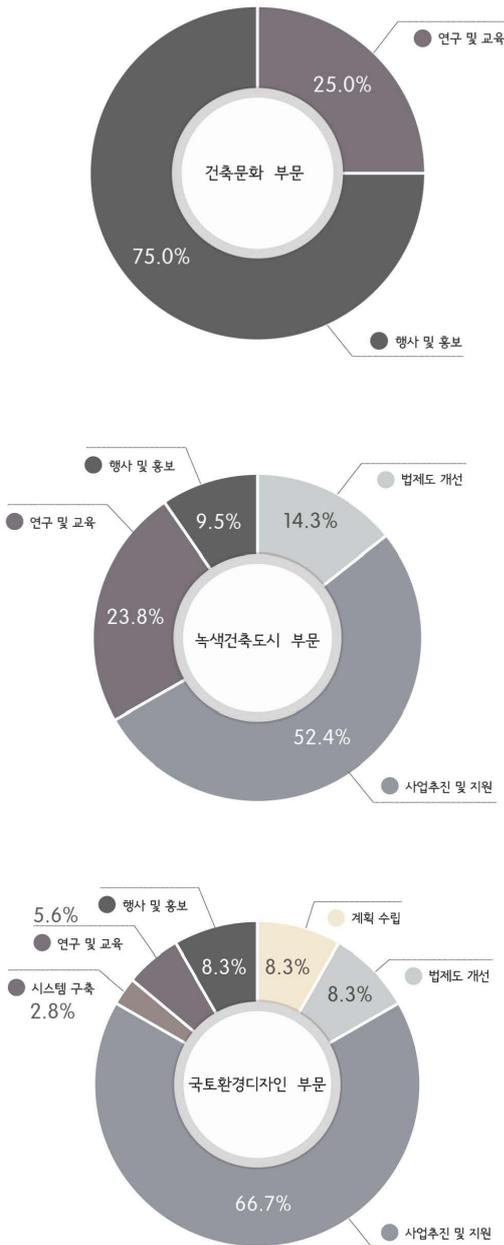


중앙부처에서는 전체 26건의 정책사업 중 「녹색건축도시 부문」에 해당하는 사업 및 시책이 13건으로 주로 국토교통부에서 중점 발표하였으며,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전’, ‘폭설, 폭풍,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 건축 추진’, ‘그린 리모델링, 공공건축물이 앞장선다’ 등의 정책 사업이 발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산시, 산북도로에 국내 최초 방재(防災)공원 조성’, ‘충남, 공공디자인 컨트롤타워 개소’ 등 13개 지자체에서 총 43건의 정책 사업이 발표되었으며 가장 중점 보도된 부문은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으로 32건(34.8%)의 사업 및 시책이 발표된 것으로 정리된다.

| 주관부처 | 건축문화 부문 | 녹색건축 도시 부문 | 국토환경 디자인 부문 | 부문별 합계 |
|-------------|-----------|------------|-------------|-----------|
| 중앙부처 | 1(1.4%) | 13(18.8%) | 11(15.9%) | 25(36.2%) |
| 지방자치단체 | 11(15.9%) | 8(11.6%) | 24(34.8%) | 43(62.3%) |
| 합계 (중앙부처) | 1(1.4%) | 13(18.8%) | 12(17.4%) | 26(37.7%) |
| 합계 (지방자치단체) | 11(15.9%) | 8(11.6%) | 24(34.8%) | 43(62.3%) |
| 총 계 | 12(17.4%) | 21(30.4%) | 36(52.1%) | 69(100%) |

■ 주관부처별 정책동향



각 부문에 대한 세부분야별 동향에 대해 살펴보면, 「국토환경 디자인 부문」의 정책 사업이 69건 중 36건(52.2%)으로 가장 중점 발표되었다. 이 중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 24건(34.8%), '계획수립, 법·제도 개선, 행사 및 홍보' 분야 각각 3건(4.3%), '연구 및 교육' 분야 2건(2.9%),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1건(1.4%)이 발표되었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다음으로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21건(30.4%)의 정책 사업이 발표되었으며,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에서 11건(15.9%),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5건(7.2%), '법·제도 개선' 분야에서 3건(4.3%),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 2건(2.9%)씩 발표되었다.

2014년 3월 한 달간 가장 중점적으로 발표된 세부분야는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로 총 36건(50.7%)의 정책 사업이 발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 14건(20.3%),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10건(14.5%), '법·제도 개선' 분야 6건(8.7%) 순으로 정리된다.

| 세부 분야 | 건축문화 부문 | 녹색건축 도시부문 |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 분야별 합계 |
|-------------|------------------|------------------|------------------|-----------------|
| 계획수립 | - | - | 3(4.3%) | 3(4.3%) |
| 법·제도 개선 | - | 3(4.3%) | 3(4.3%) | 6(8.7%) |
| 사업추진 및 지원 | - | 11(15.9%) | 24(34.8%) | 35(50.7%) |
| 시스템 구축 | - | - | 1(1.4%) | 1(1.4%) |
| 연구 및 교육 | 3(4.3%) | 5(7.2%) | 2(2.9%) | 10(14.5%) |
| 행사 및 홍보 | 9(13.0%) | 2(2.9%) | 3(4.3%) | 14(20.3%) |
| 총 합계 | 12(17.4%) | 21(30.4%) | 36(52.2%) | 69(100%) |

■ 세부분야별 정책동향

꿈꾸고 만들고 누리는 DDP

디자인·창조산업 발신지로 힘찬 첫 걸음

중구 을지로 281번지 舊동대문운동장 자리에 들어선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랜드마크 건축물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오는 21일(금) 개관, 컨벤션, 전시, 공연, 패션쇼 등이 상시 이뤄지고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역동적인 '디자인·창조산업의 발신지'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DDP는 8개 전시프로그램과 올해로 14주년을 맞은 서울패션위크를 시민·관광객에게 첫 선을 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24시간 활력 넘치는 도심 속 쉼터이자 세계적 문화명소로 시민들에게 다가간다.

8개 개관전시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 30장 풍속화첩을 담은 신윤복의 '해원전신첩'을 비롯한 59점의 국보급을 전시하는 간송문화전, 이상화 아트북, 박태환 3D 애니메이션, 박찬호 글러브, 황선홍 축구화 등과 스포츠 관련 제품을 전시하는 스포츠디자인전, 자하 하디드의 상상력 넘치는 디자인 소품을 소개하는 자하하디드전 등에서 총 920개 작품을 선보인다.

DDP를 설계한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도 개관을 앞둔 3.11~3. 12 서울에서 공식일정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하며 DDP 건축 이야기와 자신의 작품세계를 들려주었으며 11일에는 기자간담회를, 12일에는 '자하 하디드_360°'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했다.

대지면적 62,692㎡, 총면적 86,574㎡의 DDP는 지하 3층, 지상 4층(최고 높이 29m) 규모다. △알림터 △배움터 △살림터 △디자인장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5개 시설 내 총 15개 공간이 들어서 있다.

디자인 창조산업의 신제품과 트렌드를 소개하고(알림터), 전시를 통해 지식을 전파하며(배움터), 다양한 최신 트렌드 상품을 접하는 디자인창조산업 인프라(살림터)로서의 정체성을 공간 구성에 담았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시민과 세계인이 디자인을 통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공성'을 추구하되, △24

시간 서비스 활성화 △60개 명소화 △100% 자립경영 이라는 3대 운영전략을 통해 '효율성'을 갖춰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백종원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는 "시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디자인(Design with People)"을 통해 DDP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디자인·창조산업의 발신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알림터



살림터



디자인장터



배움터

2014.03.03.

.....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서울디자인재단

100가지 이야기 따라 한양도성을 즐기는 방법!

한양도성 이야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따라 한양도성을 걷다』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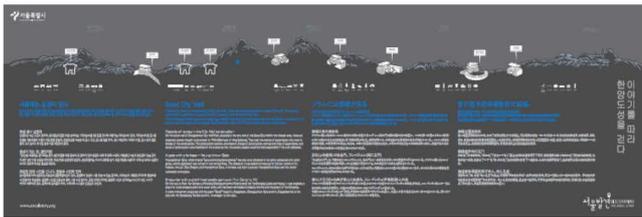
서울시는 '서울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명소화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한양도성의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스토리 100선 『이야기를 따라 한양도성을 걷다』를 발간하고 한양도성을 전망하기 좋은 전망장소에 이야기패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N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본 한양도성,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쏘옥!〉
N서울타워 전망대에서는 서울시내의 전경과 함께 한양도성이 한눈에 들어온다. 여기에 한양도성 파노라마 지도를 래핑하고, 전망을 바라보며 한양도성 이야기 카드를 손으로 돌리면서 볼 수 있는 스토리박스를 설치했다.



■ N서울타워 전망대에 설치된 한양도성 파노라마 지도 래핑모습

해의 관광객들이 방문이 잦은 청와대 사랑채와 한양도성이 바라보이는 북악 팔각정 전망대에는 한양도성의 역사와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야기패널을 설치했다.



■ 청와대 사랑채에 설치된 부포인트 이야기 패널 내용

〈100가지 이야기 따라 한양도성을 걷는 스무 가지 방법!〉

스토리 100선 『이야기를 따라 한양도성을 걷다』는 서울도심에서 한양도성으로 연결되는 길과 이야기 거점을 중심으로 이야기 여행길을 구성하고, 100가지 이야기를 270여 페이지로 엮은 단행본이다.

100가지 이야기는 한양도성과 그 주변 지역에 관련된 역사, 자연, 마을과 삶, 예술 등에 얽힌 이야기로, 한양도성의 4대문과 4소문을 중심으로 4개의 이야기 권역을 설정하고 여기에 20개의 이야기 테마를 담아, 이야기여행기를 따라 한양도성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양도성 스토리 100선 '이야기 길을 따라 한양도성을 걷다' 표지

한양도성 스토리 100선은 서울 시민들과 한양도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양도성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한양도성과 600년 역사의 도시 서울을 재인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한양도성 스토리텔링 사업은 “옛 한양도성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수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확인하고, 서울시민의 자긍심을 북돋우는 일”이라며, “여전히 삶의 터전이며 훌륭한 문화유산인 한양도성의 숨겨진 이야기를 따라 걸으며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4.03.05.

.....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서울研, '아시아 메가시티의 삶의 질과 행복서울' 국제세미나 개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행복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국제세미나

본 국제세미나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함께 수행하는 도시사회정책지표체계인 서울서베이¹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서울서베이에서 나타난 서울시민의 행복 문화를 중심으로 행복서울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이 우선시 되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특히 서울의 행복과 함께 아시아 메가시티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 현황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아시아 메가시티의 삶의 질을 다루는 세션1과 서울의 행복을 중심으로 하는 세션2의 라운드테이블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세션 1에서는 아시아 메가시티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관한 분석을 각 도시의 학자들이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분석, 발표하였다.

고베대학의 게이코 카타기리(Keiko Karagiri) 교수는 '동경의 삶의 질: 고령화된 메트로폴리스 도시'라는 발표에서 동경의 고령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홍콩, 방콕, 대만의 삶의 질은 사회의 질(social Quality) 프레임워크를 통해 발표되었다. 사회의 질이란 유럽을 중심으로 구축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포함하는 사회의 질적 상태를 분석하는 것으로써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통합성, 사회적 역능성의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¹ 서울서베이는 2003년부터 매년 수행하는 도시사회정책지표체계이며 서울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서울시의 정책이 시민들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지표체계이다. 12개 분야 200여개의 지표로 이루어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체계를 통해 서울에 사는 보통사람들이 어떤 경제사회적 조건에 처해있는지, 서울의 인구구조와 주거, 복지 및 문화, 의식과 가치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한다. 이는 서울의 도시정책이 서울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홍콩의 사회의 질(Social Quality)에 대해서는 홍콩시립대학의 레이몬드 첸(Raymond Chan) 교수가 발표하였다. 그는 아시아 메가시티로서의 홍콩의 특성을 개관하고 홍콩사회의 현재의 사회의 질을 사회적 신뢰, 사회통합, 사회적 역량 등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방콕의 사회의 질에 대해서는 태국 국왕의 직속 학술기관인 KPI(King Prajadhipok's Institute) 연구개발실 실장인 타일와디 부리쿨(Thawilwadee Bureekul) 박사가 발표하였으며, 대만의 삶의 질은 국립대만대학교 교수인 릴리안 왕(Lillian Lih Rong Wang) 박사가 대만 시민들의 웰빙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세션 2에서는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경쟁력연구센터장이 '서울의 행복'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었다. 라운드테이블의 진행은 장덕진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이석우 선임기자(서울신문), 은기수 서울대 교수, 김석호 성균관대 교수, 김주현 서울대 연구교수, 조영삼 서울시 과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아시아 메가시티의 삶의 질의 발표에 대한 코멘트와 함께 서울시민의 행복증진 방안을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서울연구원장은 "이번 국제세미나는 서울의 행복 현황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특별한 계기일 뿐만 아니라 서울연구원의 2014년 중점 사업인 아시아 메가시티의 삶의 질 연구의 첫 번째 작업이다.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아시아 메가시티의 삶의 질 현황을 상호 비교하면서 메가시티의 공통점과 아시아 도시의 특수성을 공유하고, 행복서울을 위한 유용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03.05.

..... 서울시 서울연구원 도시경쟁력연구센터

대구시,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도시재생 관련 실무 강의, 시민들 관심 폭발적

대구시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도시·지역개발과 도시재생에 대

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행정과 시민 소통강화 및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해 5일부터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을 시작했다.

대구시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5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개강한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정부-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 3.0 패러다임에도 맞는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운영 첫날 300여 명의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다.

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시작된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매년 봄·가을 두 차례 운영하여, 그동안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 및 학생 등 1천 4백여 명이 참가한 바 있다. 이번에는 수강 신청자가 계획 인원(300명)보다 훨씬 많은 500명이나 몰려 이들을 위해 6월 경 한차례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강사진은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 및 관계 전문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도시개발 관련 법률, 실무사례, 세무, 감정평가, 소송·판례 및 등기이전 등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생활 속에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5일 개강한 이번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앞으로 4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며, 6주 과정을 모두 이수한 수강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주민의 전문역량을 높이고, 행정과 시민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정부3.0에도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4.03.06.
..... 대구광역시 도시재생과

빛 공해를 넘어 ‘좋은 빛’으로...서울시 ‘좋은빛상’ 서울시, 올해 3번째 맞이한 서울시 ‘좋은빛상’ 4개 부문 선정

서울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매년 3월 6일² 「서울특별시 좋은빛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3번째로 시행한 ‘서울특별시 좋은빛상 공모전’에는 학술·설계·시공 및 제조 등 총4개 분야에서 14개 작품이 출품되었는데, 이중 3개 분야에서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

대상은 설계분야에서 ‘복서울시립미술관’ 경관설계를 담당한 (주)휴엘디자인 정영진 대표가 수상하였다. 대상을 받은 복서울시립미술관 경관조명 콘셉트는 건축물의 형태미를 야간에 아름답게 보여주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이 있도록 좋은 빛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 설계부문 : 대상(작품명 : 복서울시립미술관)

최우수상(학술부문)을 수여한 단국대학교 김희서 교수는 공간조명의 빛공해 기술개발 및 좋은 빛 형성 연구 등 인공조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최우수상(시공부문)을 수여한 태원전기산업(주) 양영희 대표는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의 경관조명을

² 대한민국 최초로 경복궁에 전기에 의한 조명을 실시한 날(1887.3.6.)



시공함에 있어 최소한의 빛으로 건축물의 야간형태미를 드러내도록 품격 있게 조성하였다. 우수상(설계분야)은 받은 (주)알토 최유미 이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관의 건축미의 특성을 좋은 빛으로 경관미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였다.



■ 시공부문 : 최우수상(작품명 : 레미안 갤러리)

또한, 서울시는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좋은빛상 입상자 4명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시·자치구 직원 및 시민, 조명학회·협회·조명산업계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조명·시민과 소통하는 좋은 빛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시는 이러한 분야별 전문가의 연구과제 발표를 계기로 도시빛정책목표와 환경변화에 걸맞는 스마트한 조명기술 개발 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빚공해 없는 좋은 빛 형성으로 시민이 건강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며, 조명산업계에는 좋은 빛 광원에 대한 에너지효율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신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과장은 “도시·조명·시민과 소통하는 건강하고 좋은 빛환경을 만들어 품위있고 아름다운 빛의 도시 서울을 창조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이 이루어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2014.03.07.

.....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미래 건축의 방향의 총아' DDP가 보여준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세계적인 건축 기술과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

서울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로서, 미래 건축의 방향의 가늠자가 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세계적인 건축 기술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내·외부 건물 전체가 자유로운 곡선, 국내 건축설계 세계수준 업그레йд〉 DDP는 총면적이 86,479㎡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로 건물 내·외부 전체가 자유로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이를 구현함으로써 국내의 설계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йд 시켰다.

〈외부, 크기, 곡률, 형태가 각기 다른 45,133장 알루미늄 패널로 구현〉 설계자가 의도한 아름답고 부드러운 곡선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 최첨단 설계기법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도입되었다.

〈메가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기술로 기둥 전혀 보이지 않는 실내 구현〉기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실내를 구현하기 위해 메가트러스(Mega-Truss, 초대형 지붕트러스)와 스페이스 프레임(Space frame, 3차원 배열) 등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됐다.

〈외부 연결브리지, 중층브릿지 표면 등은 고난이도 노출콘크리트로 마감〉 DDP의 외부 연결브리지, 외부 계단 및 램프, 어울림광장, 살림터 트렌드랩(기둥+파라펫) 등은 내외장 표면을 콘크리트만으로 마감하는 고난이도의 기술인 노출콘크리트로 건물 표면을 마감해 3차원 이중 곡면의 세련된 느낌을 더했으며 국내의 노출콘크리트 품질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80만본 세팅 식재해 지붕면적의 40% 녹화 '단일 건물로는 아시아 최대'〉 도심지의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해 DDP 지붕 면적

의 40%에 이르는 9,080㎡에 지붕녹화를 했다. 단일 건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이며 지붕에는 섬기린초, 금강기린초, 리플렉섬, 파랑세덤, 땅채송화 등 5종, 80만본의 세덤이 식재되었다.



■ 지붕녹화 전경

이 외에도 친환경 설비를 통해 친환경1등급 건물로 인정받았으며, 시공 전 실물크기 모형 샘플 필수 제작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하고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건설을 진행하면서 2차 곡면패널을 완벽하게 제작하는 성형기계(MPSF, Multi Point Stretching Forming Machine) 및 절단기(3차원 Laser 절단기)를 국내최초로 개발했다.

서울시는 한 해 100만 명이 찾는 매력적인 문화도시로 탈바꿈 시킨 스페인 빌바오시의 구겐하임미술관처럼 DDP를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문화도시의 아이콘으로 명소 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정형 건축물인 DDP의 디자인을 완벽하게 구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 수준은 DDP 건설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음은 물론 국내 건축업계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DDP 외부전경

2014.03.07.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제주 마을 안에 서서, 마을을 이야기 한다

19개 마을 이야기를 수록한 마을 만들기 사례집 발간

제주자치도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 19가지 색깔의 마을 만들기 이야기를 한데 모은 “제주, 마을 안에 서서”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제주, 마을 안에 서서’는 이야기와 사진이 어우러진 형식의 마을 만들기 사례집으로 열아홉 개의 마을에 대하여 설촌유래, 마을자원 및 볼거리, 마을특화사업, 체험프로그램, 마을주민들의 인터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마을사업이 생소한 마을에 참고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례집에는 푸른 바다 하얀 소금이 빛나는 구엄마을의 돌소금을 테마로 어촌체험마을을 일구어낸 마을 만들기 이야기, 전통테마마을로 시작된 마을가꾸기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테마형 체험마을로 특화에 성공한 낙천아홉굿마을의 마을가꾸기, 제주 목축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녹고귀권역이 꿈꾸는 체험마을 이야기와 그들의 바람, 농촌전통테마마을 명도암참살이마을의 시대별

이번 학술회의는 '성곽마을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함을 통해 성곽마을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한양도성 위주의 복원이나 각종 규제를 통한 보존이 아니라 적절한 환경개선과 지원 정책으로 한양도성 보전과 함께 주거지 환경도 개선되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학술회의가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을 주제로 다루는 최초의 학술행사로, 이를 통해 성곽마을의 가치와 가능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 “성곽마을이 더 이상 낡고 어두운 도시화의 그늘이 아니라 이제는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랑스러운 소중한 미래 융합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03.13.

..... 서울시 주거환경과

지역건축가와 '충남 건축의 미래' 함께 그린다

21일 건축관련 기본계획 수립 위한 지역 건축사 대상 공청회

충남도는 21일 아산시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충남건축사회 회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건축사회 정기총회와 연계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충남도의 지역경제성을 회복하고, 창의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건축정책 방향에 대해 지역 전문가간 공론을 형성하고,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건축분야의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건축관련 기본계획 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공청회로서 도 건축관련 기본계획의 성격, 위상, 계획의 주요내용 및 실행체계 등에 대한 설명과 도의 건축·도시 관련 주요현안 및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설문조사에서는 건축관련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정책적 아젠다와 함께, 계획 부문별

(공간디자인, 녹색건축, 건축문화) 실천과제(안)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질의했다.

도는 이번 건축사 대상 공청회를 포함해 시·군 실무담당자, 도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 대상 공청회를 통해 도가 지향해야 할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데 지역 건축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군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4.03.21.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건축문화팀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전' 열린다

국토부, 「충남개발공사 복합커뮤니티시설」 설계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설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할 신진건축사³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함께 신진건축사 대상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본 공모사업은 우수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실적, 규모면에서는 열세인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들이 공공건축물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참신한 디자인을 발굴하고 신진건축사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올해 신진건축사 대상 첫 설계공모사업은 충남개발공사의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신축공사」(3월26일 공고) 사업이다.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은 연면적 약 2,800㎡(지상 3층, 지

³ 신진건축사: 만 45세 이하이고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를 한 자



하 1층)의 규모로 면사무소,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다. 설계 공모 당선자에게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설계권을, 우수작과佳作 등에게는 상금 등을 각각 수여한다.⁴

국토부는 본 설계공모 외에도 포항시(4월 공고예정), 수자원공사(4월 예정) 및 LH(일정 미확정) 등과 함께 연중 순차적으로 신진 건축사 대상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진건축사 설계공모를 통해 신진건축사들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03.21.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안전한 부산만들기 본격 시동

‘범죄예방 안심길 조성사업 준공식’ 개최

부산시는 3월 28일 오전 11시 구포2동 가람중학교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부산지방경찰청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안심길 조성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지난해부터 부산시에서 추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하 셉테드) 시범사업’의 결실을 맺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사업은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적 요인과 주민 불안요소를 분석하고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마을에 안전 감시체계를 구축해 범죄자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민들에게는 범죄로부터 안심감을 주는 새로운 범죄예방 전략사업이다.

이번 ‘셉테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범죄에 취약한 4개 지역(북구 구포동, 서구 남부민동, 사하구 감천동, 사상구 모라동)을 선

정해 △대상 지역 내 범죄신고 건수 및 범행위치 등 범죄유발 환경조사 △주택·골목길 유형 등 주거환경조사 △세대수·주민인속도 등 사회인구학적 조사를 실시했으며, 범죄유형별 불안도 등에 대해서는 직접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주거 특성과 거주민들의 의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목길에 안심길 조성 안내간판과 갤러리를 겸한 조명등을 설치해 범죄동기를 제거하고 비상벨과 방범창, 그리고 반사경과 안심구역을 설정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를 각종 사업추진 시 적용하도록 제도화했다. 또한, 주민이 범죄신고 장소를 설명하기 어려운 취약한 골목길 1,625곳에 위치 확인과 경찰출동이 쉽게 되도록 범죄신고 구역 표지판을 설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셉테드 시범사업을 계기로 물리적 환경개선 일변도의 사업에서 벗어나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불안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올해에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부산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27.

..... 부산광역시 도시경관담당관실

⁴ 최우수작(1점)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우수작(1점) 500만 원,佳作(1점) 200만 원

폭설, 폭풍,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 건축 추진!

건축물하중 현실화, PEB 등 특수건축물 설계·감리 강화

앞으로 폭설, 폭풍, 지진 등에 관한 건축물 하중기준이 기상이변에 대비해 개선된다. PEB 등 특수 건축물은 설계의 적정성을 건축심의를 통해 검증받아야 하고, 도면에 맞게 견실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설하중 등 건축구조기준을 기상이변에 대비해 조정

지난해부터 폭설, 폭풍, 지진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⁵ 중이며, 최근에 문제가 된 적설하중 기준은 금년 5월까지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개선하되, 개정 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지붕 기울기가 1/3 미만인 경우에는 습설하중을 25kg/m²를 추가하고,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산지 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지역적설하중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게 권고하였다.

2. PEB 등 특수구조물 설계 및 감리 내실화

PEB 구조는 작은 설계 또는 시공 부실에도 구조체가 일시에 붕괴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PEB 등 특수 구조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하기 전에 건축심의를 하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하여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⁵ 지진 및 기후변화 대응 소규모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성 향상기술 개발(13.5.~18.5,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3. 불법용도 변경 관리 강화

현재 PEB 구조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을 조사 중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당초 허가받은 구조와 용도로 사용되는 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기준」을 금년 내에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TF를 운영하여 3월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2014.03.02.

국토교통부

인천시, 지자체 최초로 고유 설계VE 브랜드(BI) 구축

‘정부 3.0’ 핵심가치 실천을 위한 선도적 역할 기대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고유의 설계VE(Value Engineering) ‘브랜드 BI(Brand Identity)’를 구축해 전국에 적극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설계VE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에 대응하고, ‘정부 3.0’의 핵심가치에 부합해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인천의 설계VE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브랜드 구축을 추진했다.

시가 구축한 설계VE BI는 ‘인천의 브랜드 가치에 가치를 더하기 위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 시는 2010년부터 각종 건설사업의 설계VE를 통해 3,6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25.7%의 품질 및 기능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우수성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2013 전국 설계VE 경진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녹색건축도시 부문



시는 올해 '정부 3.0'의 핵심가치 실천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건설사업 『설계경제성(VE) 검토』서비스'와 설계VE 기반 조기 구축을 위한 '건설VE 표준매뉴얼'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11월말에는 시가 주관하는 '2014 대한민국 VE 경진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시의 '정부 3.0' 실천 등 설계VE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14.03.03.

.....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전국 건축물 총 6,851,802동 / 33억 7천 6백만㎡

전년대비 수도권은 2.1% 증가, 지방은 0.1%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 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대비 55,563동(0.8%) 증가한 6,851,802동, 연면적은 34,829천㎡(1.0%) 증가(서울 63빌딩 연면적의 146배)한 3,376,649천㎡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2,627,686㎡(2.1%) 증가한 1,580,082천㎡이고, 지방은 2,201,643㎡(0.1%) 증가한 1,796,566천㎡로 조사되었다.

(단위: 천동, 천㎡)

| 구분 | 동 수 | | | 연면적 | | |
|-----|-------|-------|-------|-----------|-----------|-----------|
| | '11년 | '12년 | '13년 | '11년 | '12년 | '13년 |
| 전국 | 6,731 | 6,796 | 6,851 | 3,295,105 | 3,341,819 | 3,376,649 |
| 수도권 | 1,893 | 1,905 | 1,914 | 1,513,168 | 1,547,455 | 1,580,082 |
| 지방 | 4,838 | 4,890 | 4,937 | 1,781,936 | 1,794,364 | 1,796,566 |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주거용이 1.3% 증가한 1,574,853천㎡(46.6%)으로 가장 많고, 상업용은 1.7% 감소한 689,053천㎡(20.4%), 공업용은 3.8% 증가한 344,581천㎡

(10.2%), 문교·사회용은 2.1% 증가한 295,806천㎡(8.8%)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주거용이 1.7% 증가한 743,169천㎡(47.0%), 상업용은 2.5% 증가한 342,315천㎡(21.7%), 문교·사회용은 3.7% 증가한 133,194천㎡(8.4%), 공업용은 3.6% 증가한 116,798천㎡(7.4%), 순이며, 지방은 주거용이 0.9% 증가한 831,684천㎡(46.3%), 상업용은 5.6% 감소한 346,737천㎡(19.3%), 공업용은 3.8% 증가한 227,783천㎡(12.7%), 문교·사회용은 0.8% 증가한 162,612천㎡(9.1%)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4.03.05.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 위한 소셜픽션 상상잔치 참여하세요

'소셜픽션으로 그리는 에너지자립도시 서울'을 주제로 시민,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시민대토론회가 3월 12일(수)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30분 동안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2012년 4월 26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해 2014년까지 200만 TOE를 감축하는 원전하나 줄이기를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2년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2014년 2월 목표의 73%인 146만 TOE를 감축하였다.

금년 상반기면 목표인 200만 TOE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전하나 줄이기 1단계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2단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환경, 에너지 등과 관련된 시민단체·기업·종교계·학계·일반시민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소셜픽션으로 그리는 에너지자립도시 서울’이라는 주제로, 에너지 생산, 효율화, 산업·일자리, 공동체·복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미래 에너지에 대한 상상력을 펼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소셜픽션’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기존 현안 위주의 토론에서 벗어나 시민들 스스로 보다 먼 미래의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상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발전소장, 에너지 감성 디자이너, 에너지절약 컨설턴트 등 에너지관련 미래 직업을 가지게 하여 적극적으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한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에너지 효율 등급 및 에너지 미래 직업을 스스로 선정하고, 미래 에너지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한 그림을 그리며, 그룹별로 개인들의 상상을 함께 공유하게 된다.

그룹별 상상은 무대 위에 설치된 구조물에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에너지 미래 이미지가 표출되면서 마무리 하게 된다.

아울러 토론회에서 제시된 비전이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피드백 할 예정이며,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내용은 분야별 집중토론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4.03.04.

.....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건설신기술 활용으로 공사비 절감하세요

건설신기술 전국 발주청 워크숍 개최...신기술 활용도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국 발주청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는 「제7회 발주청 관계자 신기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최근 지정되어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18개의 신기술의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건설신기술은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89년 도입한 제도로 '13년 말까지 717건을 지정하여 누계 활용실적은 4만여건, 금액으로는 약 8조 원에 달한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기술 활용 시 기존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공사기간은 약 45% 단축되며, 공사비는 약 31%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신기술의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발주청에서 특정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에 따른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하는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어 금년도부터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발주청이 참여하는 「공공구매 협의회」에서 활용이 되지 않은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첫 번째 고객 되어주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발주청에 특정 기술의 사용을 직접 권고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의 분임토의를 통하여 발주청의 활용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건의사항 등 다양한 발주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3.05.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 제작·배포

아파트 대피 공간, 화재 시 대피요령, 화재예방 안전수칙 안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을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녹색건축도시 부문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최근 한 아파트 화재 발생 당시 발코니를 통해 옆 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시설(경량칸막이)이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건을 계기로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소화전 사용요령, 가스·전기 안전수칙 등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정리하여 제작되었다.

우선, 입주자가 입주 시에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위치 등이 표시된 안내 그림을 포함하였고, 해당 공간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하고, 현관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피요령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방방재청의 협조를 받아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입주민의 초동역량 강화를 위해 소소심(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익히기와 가스·전기 화재예방 안전수칙, 소방차 출동 시 양보요령 등을 포함하여, 아파트 입주자의 화재예방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작된 가이드가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민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전국의 관리주체 등에 적극 전파하여 공동화재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3.12.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최초의 행복기숙사, '단국대 공공기숙사' 개관

2014년 1학기 5개교(6개동), 총 1,784명 학생 입주 혜택

정부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서 행복(공공)기숙사로는 최초로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단국대 행복(공공)기숙사'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하여 단국대 캠퍼스 내에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여 건설한 기숙사로서, 수용규모는 928명, 건축규모는 지상 10층(연면적 13,206㎡)이다

또한 금년 1학기에는 단국대 행복기숙사를 시작으로 경희대(이문동, 회기동), 대구한의대, 서영대(파주), 충북보건과학대 등 모두 5개교(1,784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가 개관될 예정으로, 입주 학생들은 기존 사립대 민자 기숙사비(평균 34만 원)에 비해 40%이상 저렴한 월 19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및 교육부는 대학생용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5년간(17년까지) 대학생 약 8만여 명(17년 대학생 주거지원율25%)에게 저렴한 주거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국대 행복(공공)기숙사 개관'은 정부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의 결실로서 앞으로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구분 | 건축규모 | 연면적 | 수용규모 | 개관월 | |
|----------------|----------|----------|-----------|---------|-------|
| 단국대학교(천안) | 지상10층 | 13,206㎡ | 232실/928명 | '13.3 | |
|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 이문동 | 지상7층(2층) | 1,694㎡ | 41실/73명 | '13.3 |
| | 회기동 | 지상5층(1층) | 1,323㎡ | 26실/51명 | '13.3 |
| 대구한의대학교 | 지상5층(1층) | 8,501㎡ | 200실/400명 | '13.3 | |
| 서영대학교(파주) | 지상4층(1층) | 2,125㎡ | 52실/102명 | '13.3 | |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 지상6층 | 4,422㎡ | 116실/230명 | '13.3 | |

2014.03.11.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서울시, 청계천 역사성·자연생태성 개선 본격화

청계천시민위원회는 지난 2005년 암천(暗川)에서 개천으로 거듭난 청계천을 역사문화가 담긴 생태하천으로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청계천 역사성 및 자연생태성 회복(안)」을 발표, 서울시에 건의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2년 3월 청계천시민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2년여 동안의 활동 결과물로서, 그동안 청계천 주변지역 조사·모니터링, 설문조사, 시민열린회의, 시민대상 설명회 등 시민의견 수렴을 거쳤다.

서울시는 큰 틀에서 청계천시민위원회가 제시한 ‘청계천 역사성 및 자연상태성 회복’ 방향에 공감하고, 이 중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자연생태하천 조성, 보행친화거리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청계천관리 등은 올해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실현 논란이 예상되는 수표교 증건 등은 타당성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 후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계천시민위원회는 역사문화성 결여와 인공어항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미흡한 자연생태성, 또 계단형 진출입로로 인한 통행불편 등 질 낮은 보행환경 세 가지를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위원회가 제시한 방향은 3대 비전 △역사문화를 계승하는 매력 있는 청계천 △자연생태가 살아 숨 쉬는 청계천 △도심활력 공간 청계천, 5개 키워드다.

5개 키워드는 ①‘수표교 원위치 증건’으로 역사성 재 회복 ②‘물길 곡선화, 보 철거 등 개선’으로 자연생태하천 조성 ③‘상류 지천 복원 및 계곡 수 활용’으로 물길 회복 ④‘넓게 걷는 청계천 위 보도, 문화 휴식거리’의 보행친화거리 조성 ⑤‘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의 시민과 함께하는 청계천 관리이다.

조명래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각계 전문가들과 심

도 있게 논의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이번 청계천 개선안을 마련했다” 며 “앞으로 장기적인 호흡으로 하나하나 제대로 복원해 청계천이 세계적인 생태·역사관광지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03.12.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울산시, 2014년 저탄소 에코아파트 만들기 사업 착수 공모결과 21개 아파트(6,098세대) 참가

울산시는 가정 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2014년 저탄소 에코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아파트는 21개 아파트 6,098세대로 구·군별로는 중구 다운현대아파트 등 5개, 남구 달동현대3차아파트 등 3개, 동구 남목그린타워 등 4개, 북구 한라그린맨션 등 2개, 울주군 천상청구제네스아파트 등 5개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월3일~2월28일 준공 10년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 사업 참여 공모를 실시하여 21개 아파트를 최종 선정했다.

이 사업 참여 아파트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탄소포인트제 가입, 승용차 요일제 참여,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절감 등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울산시는 추진 결과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 10개소를 선정하여 대상 시설별로 500만 원 이하의 고효율전동기기를 지원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 및 주민참여도가 우수한 3개 아파트를 선정하여 저탄소 에코아파트로 인증하고 현판을 수여한다.

2014.03.12.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건축물 에너지 절감 생활 속에서 느끼다 수요자 중심의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방안마련

앞으로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건축물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생활 속에서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한 “에너지·환경 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일반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에 참여하고 에너지 절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 ①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대폭 향상
- ② 다양한 인센티브 통해 기존 건축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 ③ 공공부문 에너지 성능 개선 선도
- ④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효율성 제고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녹색건축이 활성화 될 경우 14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여름철 에너지 위기 극복과 함께 실내 거주만족도가 향상되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는 등 국민행복에 기여할 것이다.

2014.03.13.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올해 '해외건설 전문 인력' 4천 명 양성

청년층 해외일자리 창출 및 해외건설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추력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술교육원 등 9개 기관에서 '14년 총 4천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취업 과정>

우선,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생 등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취업과정 규모를 '13년 2,800명(목표)에서 '14년 3,3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특히 외국어 사용이 능통한 고급 인력 양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해외건설공사 비즈니스 및 수주에 필요한 영어 실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해외건설 영어 과정을 전년 대비 3배 규모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고용부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스페인어·중국어 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신흥국 진출확대에 교두보 역할을 할 우수 인력을 다수 공급할 예정이다.

상기 외국어 전문과정은 모두 원어민·해외건설 경험자로 구성된 강사진이 실제 사례 위주의 수주계약·사업관리 등의 과목을 현지 언어로 교육을 진행한다.

<재직자 과정>

건설업체 재직자의 역량 강화 및 국내건설에서 해외건설 분야로의 전직 확대를 위한 전문 교육도 700명 규모로 실시된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교육을 실시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출장교육(300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희망자는 교육일정 및 지원 자격 확인 후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08년부터 현재까지 취업과정 수료생의 취업률은 68%에 달하며, 이를 통해 고용률 증대와 해외건설업체의 수주 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다.



■ 해외플랜트 취입과정 현장실습

2014.03.14.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서울시, 건물에서 새는 에너지 막는 효율화 사업에 150억 지원

최근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에너지 소비의 56%를 차지하는 건물부분의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기 위해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에 국내 최저금리 1.75%로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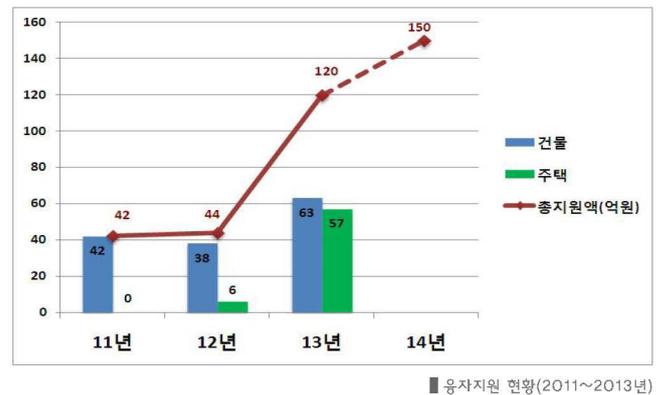
건물의 단열재, 단열창호 교체에서부터 고효율 보일러 교체 비용에 이르기까지 새는 에너지를 잡고 쓰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에 최대 20억 원까지 용자 지원한다.

서울시는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사업비를 장기 저리로 용자 지원해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기금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올해는 용자 이율을 전국 최저 수준인 연 1.75%로 대폭 인하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 운영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3년 한 해 동안 에너지 효율 개선에 참여한 건물은 10,544개소로 '12년에 비해 207% 증가하였으며, 용자지원은 44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늘어났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추진으로 에너지사용량 65,937TOE/년을 줄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14만 2천 톤을 감축하였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2천2백만 그루를 심거나, 여의도 면적의 45



배에 해당하는 숲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전체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평소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비용에 부담을 느꼈던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4.03.14.

.....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경남도, 도심 속 힐링 공간 ‘생태놀이터’

환경부 공모사업인 ‘생태놀이터’ 시범사업 선정

경상남도는 창원 중동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가 환경부 공모 ‘생태놀이터’ 신규 조성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도시생활권의 부족한 생태공간을 확충하고, 지역민에게 놀이, 체험, 생태교육 등이 가능한 도심 속 생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전국 59개소를 신청 받아 이번에 12개소가 시범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개소 당 1억 5천만 원의 국비가 지원되게 된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창원 중동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는 그간 토지구획정리 사업 후 대상 사업지 주변 400m 이내에 공원·녹지공간이 없어 인근 주민의 공원조성 요구가 있어왔던 곳이다.

또, 공원부지 내 무단경작 및 쓰레기 불법 투기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곳으로써, 국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여기에 생태연못 등 자연형 공간과 자연 재료를 활용한 놀이 시설, 소규모 생물서식지, 휴식·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도심 속에 방치된 땅을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라며, “향후 추가로 사업 대상지역을 발굴하여, 도심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03.14.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최대 50세대까지’ 완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1.~5.1.) 추진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완화 등 규제 정상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되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로 3월 21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21.~5.1.)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

현재 20세대(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

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미 공동주택 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까지(11.6), 단독주택 중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도 30호까지 완화(12.7)된 바 있고,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50세대까지 완화하여, 노후주택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완화된다.

②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

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4.03.20.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올해 소외계층 위한 녹색공간 10곳 만든다

복지시설 나눔숲 9곳,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 1곳 추진

충남도는 올해 11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주 노인요양시설인 지장원 등 도내 9곳을 대상으로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18일 산림청 녹색사업단이 공모하는 소외시설(특수교육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서산시 성연면에 위치한 공립특수학교 서산성봉학교(학교장 유명동)가 선정됨에 따라 기금 1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아 녹색공간 조성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우선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소규모 숲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층과 낙후지역 주민들에게 휴양, 보건, 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조성되는 복지시설 나눔숲은 △공주 지장원·명주원 △보령 보령학사 △아산 수궁원 테레사의집 △논산 YWCA 여성의 쉼터·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복지재단 △금산 다사랑 △예산 새감마을 △태안 건생원 등 9곳이다.



도는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인 녹색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복권기금으로부터 27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총 27곳의 복지시설 나눔숲을 조성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소외시설(특수교육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서산성봉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1억 1000만 원을 확보하고 또 하나의 녹색공간 창출에 나선다.

소외시설(특수교육시설) 녹색공간 조성 사업은 산림청이 녹색복권 발행 수익금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된다.

2014.03.26.

..... 충청남도 산림복지과

광주시, 2014년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 사업 추진 온실가스 낮추고 녹색생활 실천할 아파트 40곳 선정 27일 사업설명회 개최

광주광역시시는 올 한해 수도, 전기, 가스를 절약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등 녹색생활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2014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와 (재)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센터는 공모를 통해 40개 아파트를 선정하고 27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설명회에서는 관리소장과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사례 발표와 사업 추진 방법, 평가지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아파트 40곳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생활을 실천하게 된다. 연말에는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생활 실천 등 2개 분야 14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22개 우수 아파트를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선정된 아파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우수사례를 모델로 아파트별 맞춤형 컨설팅, 주민리더 교육, 그린홈 디자이너 양성 및 세대별 그린홈 디자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등급별 인증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47%를 가정과 상업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아파트 간 경쟁을 통해 에너지 절감 동기를 부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참여 아파트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온실가스 저감 활동과 녹색생활 실천에 기여해 전국 모델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 총 177개가 참여해 이 가운데 55개가 우수아파트로 선정돼 주변 아파트의 녹색생활 실천 사례로 정착되고 있다. 또한 전기, 가스, 수도, 음식물 쓰레기 등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2,334톤의 CO2를 감축하고 이는 소나무 84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뒀다.

2014.03.26.

.....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생태경관 도시 울산'을 한눈에

울산시,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본격 추진 ... 내년 7월 완료

울산시는 지난 1962년 울산공업센터지정 이래 급성장해 온 울산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촬영·기록하여 살아 숨쉬는 아카이브(웹페이지 상에서 백업, 보관 등을 위해 한 곳에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총 2억 5,000만 원이 투입되어 오는 4월에 착수, 4년

계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에 완료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경관기록화 작업의 방향 설정에 대한 연구 △기존 기록자료 발굴 및 수집 방법 연구 △자료보관 및 이용 등 다양한 활용 방안 연구 △경관 기록물의 시민 공유 방안 연구 △중·장기 도시계획 등 향후 울산경관의 변천 예상지역 조사 △사진 촬영 위치별 방법(항공, 파노라마, 동영상 등) 결정 △성과품 활용 및 관리 세부계획수립 △기록 방법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경관기록을 위한 연구 및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두 번째 단계는 △울산의 자연과 인공요소, 생활상, 환경적 특징 기록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 건물, 생활상 등을 복합적으로 기록 △울산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지 선정 및 사진촬영 △사진(파노라마, 항공), 동영상, Text 등 다양하게 기록 △경관 기록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요소별로 설명 첨부(위치, 계절, 시간대, 날씨, 역사성 등) △호출되어 있는 과거 기록물(영상, 사진 등) 수집과 정리하는 등 도시경관 이미지를 다양한 형태로 기록한다.

세 번째 단계는 경관의 의미해석과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기 위해 △울산의 경관변화에 부합되는 사진과 영상의 의미해석 △과거 기록물과 현재 경관을 연결하는 스토리텔링 발굴 등을 추진한다.

네 번째 단계로는 △기록 자료의 전산화 및 분류목록을 작성 △사진과 기록이 가미된 사진화보 발간(e-book) △경관기록물의 홍보를 위한 사진전 개최 △경관기록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고 시민과 공유 가능한 웹페이지 구축 △경관 변화를 한눈에 보는 관리방안 마련 등을 위해 경관기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 사업은 마무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경관과 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한 화보를 발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한 웹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15개월간의 작업기간을 거쳐 내년 7월 첫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3.26.

..... 울산광역시 도시디자인과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이 앞장선다!

201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 선정...11곳에 20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청 제2별관 등 11개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 성능이 낮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모범사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1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시공지원사업 부문에 경기도청 제2별관 등 4개소와 사업기획지원사업 부문에 인천의료원 등 7개소를 선정하여 총 2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공지원사업은 일반리모델링으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며, 사업기획지원사업은 리모델링을 구상 중인 공공건축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기획을 지원한다.

■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

| | |
|--------------------------|---|
| 시공지원사업 (4개, 총 13억 원) | 경기도청 제2별관, 수자원공사 물사랑 어린이집(대전), 문경시청사*, 서울세관 2동 청사* |
| 사업기획지원사업 (7개, 총 7억 원) | 인천의료원, 정읍시 연지청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수동(서울),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 목포대학교 사회과학관, 거창여고, 춘천교도소 |

*'13년 사업기획지원사업 대상 중 우수사례 2개소를 선정하여 '14년 시공지원사업으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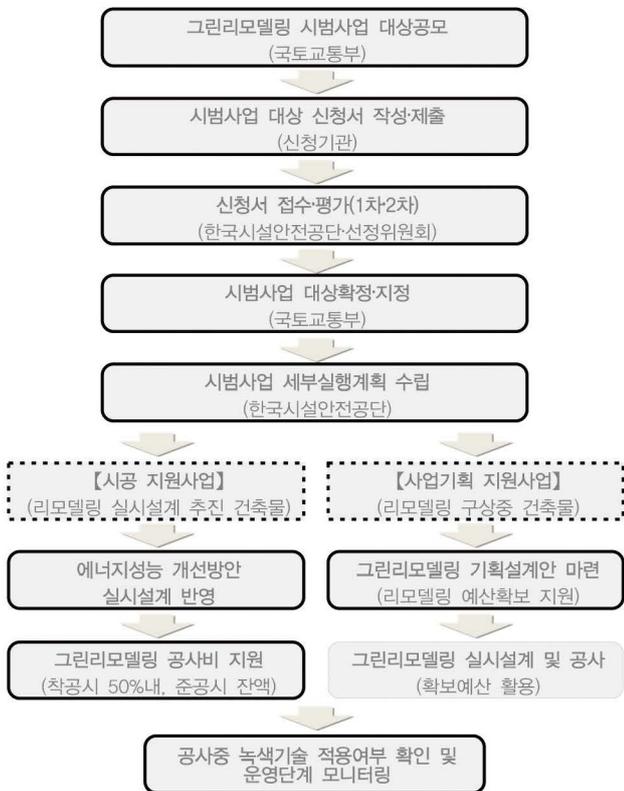
시범사업 시행자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조·에너지진단,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녹색건축도시 부문



시범사업 대상은 지난 2월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총 52건이 접수되었으며,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의 1차 및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신축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의 모범 사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사업시행절차

2014.03.27.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토부 '건설 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가 양성' 본격화 기획설계, 타당성 검토, PM 등 고부가가치 분야 집중 지원하기로

국토교통부는 변화하는 해외건설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건설 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최근 해외 건설시장은 단순 도급방식에서 벗어나 EPC, PPP, 일괄 공사 등의 투자개발형 사업 형태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설계, 시공 등의 전공지식과 함께 기획, 파이낸싱, 사업관리, 커뮤니케이션 등 종합적인 역량을 갖춘 글로벌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건설인력 교육은 단기 전문과정에 그치고, 플랜트 분야에 치우쳐 있어 해외시장의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수준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프로젝트의 기획에서 운영에 이르는 라이프 사이클을 기반으로, '건설 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가 양성 특성화 대학원' 2곳을 선정하여, 연간 15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5월 선정된 대학(14.5)들은 교과과정 준비와 신입생 선발 등을 거쳐 내년 3월(15.3)부터 교육을 시작하고, 연간 50명의 건설 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가를 배출할 계획이다.

■ '건설 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가 양성' 개요

- 사업기간 : '14. 5월 ~ '17. 2월
- 지원규모 : '14년도 약 15억원(대학당 약 7.5억원) / 3년 6개월간 지원
- 교육인원 : 매년 50명 규모 석사 신입생 선발, 교육 실시
- 대상분야 : SOC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철도, 항만 제외)
- 신청자격 : '15년 1학기 공모분야 관련 특성화대학원 설립 가능 대학
- 추진일정 : 사업계획 공고(3월 31일) → 제1차 접수(4월 30일) → 서면 및 현장 평가(5월 초) → 선정 및 - 협약체결(5월 중순) → 1차년도 사업 착수(6월) → 신입생 모집(10~12월) → 인력양성 시작('15.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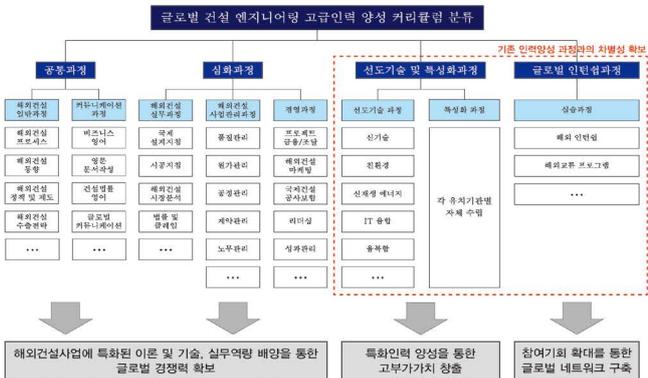
'건설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가 양성 사업'은 해외건설 공통과정(시장·동향, 정책 및 제도, 커뮤니케이션 등)과 심화과정(국제 설

계/시공지침, 해외건설 프로세스, 파이낸싱, 품질, 원가, 계약, 금융/조달, 경영/관리, 마케팅 등)으로 이루어진 기본교육 외에 해외건설 선도기술 및 특성화 과정(신기술, 친환경, IT융합 기술, 대학별 특성화 분야 등) 및 현장 중심의 글로벌 인턴십 과정(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해외교류, 해외 첨단기술 습득 등)을 통해 실무역량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건설 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가 양성 특성화 대학원’은 국내 건설인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족한 해외건설 인력수요를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내용

| 구분 | 해외건설 SOC분야 엔지니어링 특성화 대학원 | 기존 단기과정 |
|-------------|--|------------------|
| 인재상 | 엔지니어링 전체를 조망·설계할 수 있는 고급 설계 엔지니어링 인재 양성 | 프로젝트 전문인력 양성 |
| 교과과정 | 공동과정 + 심화과정 + 글로벌 인턴십 + 특성화 | 전공교육 |
| 교수법 | Team-Teaching, Problem-Based Learning | 이론중심의 일제수업 |
| 인재배출 | 해외건설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 설계자,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설계기술 기반 경영컨설턴트 | 프로젝트 전문인력 |
| 자립화 및 리스크관리 | 자립화 및 운영방안 수립 | 정부지원 종료 시 대부분 중단 |



■ 교과과정(커리큘럼) 구성

2014.03.27.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해외건설, 이젠 국내에서 외국공무원들과 상담하세요!

아제르바이잔 등 7개국의 신도시 등 사업에 시장조사·사업 발굴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하던 해외건설 상담센터를 확대하여 연중 해당국가에 대한 시장조사 및 사업발굴관련 상담과 자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상담센터는 미얀마, 몽골, 콜롬비아의 공무원이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⁶에 상주하면서 국가정보, 법령, 개발계획, 발주정보 등 상담제공 61건, 기업 간담회 2회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현지수주 정보제공에 시간·비용이 절감⁷되고 상대국 공무원으로부터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아 해외건설 지원의 실효성이 높았다는 평가에 따라 상담국가를 확대하여 상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확대 운영에 따라 우리기업의 수요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국가를 당초 3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구간과 국토정보화 사업에 관심이 많은 볼리비아 등의 공무원도 직접 파견 받아 상담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3.28.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⁶ 해외건설업자의 해외도시개발 사업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설립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운영

⁷ 상담원 1인 운영비 12백만 원/년 → 해외주재원 파견비용 200백만 원/년 (1.8억 원 절감/년)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 공모 실시

우수 경관 조성사례 발굴, '경관 향상'에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수 경관 조성사례의 발굴·홍보를 통한 지역의 경관개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3월 3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번째 시행하는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가로, 광장, 공원, 하천 및 오픈스페이스 등 공공공간과 주변 건축물, 자연환경 등이 잘 어우러진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개인 등 경관향상에 기여한 자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시가지경관·역사문화경관·농산어촌경관·자연경관·공공디자인의 5개 경관유형과 특별상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5개 경관유형별로는 지역의 경관자원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로 조성된 우수한 경관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특별상은 경관향상에 기여한 활동 중에서 매년 주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올해의 주제는 도시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간판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정하였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16일 제2회 국토경관의 날에 발표 및 시상할 예정이며, 당선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또는 관련 학회장상과 함께, 해당 지역에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는 동판도 수여된다. 또한, 상을 수상한 지자체가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응모할 경우에는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2014.03.03.

.....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소·중규모 분할 개발 속도 낸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최종 통과

세운상가군을 존치하고 주변 구역은 소·중 규모로 분할 개발하는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최종 결정돼 이 일대 개발이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2월 25일(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월)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6월 25일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발표 이후, 주민공람(13.7.25.~8.8.), 종로구의회 의견청취(13.9.4.) 및 중구의회 의견청취(13.12.12.), 공청회(13.12.20.)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

이로써 계획 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 주민 재공람 이후 3월 중 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 고시되면 각 구역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된 변경(안)은 역사문화도심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과도한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잡고, △전면철거 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해 존치하고 △주변 구역은 옛 도시조직을 고려한 분할개발방식으로 변경해 점진적인 개발을 통해 이 일대를 창조 문화산업중심지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이다.

세운지구 정비를 통해 도심 재활성화를 유도해 '활력 있는 창조문화산업중심지'로 조성한다는 비전 아래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 △역사문화와 조화되는 도심관리 △점진적 정비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보전이라는 세 가지의 큰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종전 구역면적 3~4만㎡에 이르던 8개의 대규모 구역은 옛 도시조직의 보전 및 구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소규모(1,000~3,000㎡)구역과 중규모(3,000~6,000㎡) 구역 등 총 171개 구역으로 나누되, 향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기존 도시조직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 및 통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600% 기준에서 소규모구역 및 4구역 100%, 중규모구역 200%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한 기반시설 제공량에 따라 상한 용적률의 제한 없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중전 60%이던 건폐율은 도심 가로활성화를 위해 5층이하 저층부에 한해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단, 중규모구역 및 4구역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시 적용한다.

또한 중전 계획에서 13~15%에 달하던 기반시설부담률은 소규모 구역 평균 5%, 중규모구역 평균 11%로 대폭 하향 조정돼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 최고높이는 소규모 간선부 70m, 이면부 50m, 중규모 간선부 90m, 이면부 70m이다. 단, 종묘 앞에 있는 2구역 및 4구역은 문화재심의결과에 의한 높이를 적용한다.

존치되는 세운상가군은 올해부터 주민·전문가·공공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운지구에 대한 도시재생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작년 6월 25일 세운상가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주민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후속대책으로 건축·도시·문화·산업 등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13.12.16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본 세운상가군 재조명』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2014.03.03.

..... 서울특별시 역사도심관리과

울산시 '2014년 옥외광고물 종합계획' 수립 추진 소규모 점포 간판디자인 지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

평소 도심 거리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청소년 유해전단지에 기

재된 휴대전화기 올해부터 이용 중지되어 불법업소에 대한 홍보 활동이 사전 무력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간판이 아름다운 창조적 생태경관 도시'를 목표로 하는 '2014년 옥외광고물 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시민과 함께하는 간판문화 선진화 추진 △효율적 광고물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 강화 △앞서가는 옥외광고 정책추진을 위한 역량 및 홍보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 19개 세부시책으로 짜였다.

주요 세부시책을 보면 울산시는 이동 통신사(KT, SKT, LG)와 '청소년 유해 전단지에 기재된 휴대전화 이용중지 협약'을 오는 4월 중 체결하여 불법 전단지를 통해 전파되는 불법업소에 대한 홍보 및 이용자 접근을 차단기로 했다.

또한 태풍, 천재지변 등의 사고 발생 시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옥외광고물 재난방재단'을 구성하여 오는 6월부터 운영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설치 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올해 60개소)를 대상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 디자인을 무상으로 지원기로 했다.

이밖에 옥외광고 대상전 개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5개 업체), Clean-Sign 캠페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사업비 2억 4,800만 원), 동구 대학길 간판 개선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울주군 인양읍 인양길(임양국사거리~인양초등학교)에 대해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명품 인양길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4.03.03.

..... 울산광역시 도시디자인과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전북형 생활권 사업 본격 추진한다!!

도민 행복실현을 위한 생활권 사업 147건 발굴, 지역위 제출

전라북도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권별 특화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북의 성장거점 육성을 이끌 '생활권 중·장기 전략사업'과 도민의 삶의 질에 기반을 둔 '연계협력 선도사업' 등 Two-Track으로 사업발굴을 추진하였다.

전북의 성장 거점 육성을 이끌 생활권 중·장기 전략사업은 생활권 기반구축(SOC 분야) 등 중추도시권을 중심으로 45건을 발굴하였으며, 추가 사업 발굴 및 사업구체화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권별 특화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선도 사업 14건, 연계협력사업 25건, 각 시·군별 단독사업 108건 등 총 147건을 선정해 지역위에 제출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권 선도 사업으로는, '희망드림, 새(NEW) 일(JOB) 프로젝트 (한류패션 여성 일자리 활성화) 사업, 서남부권의 '동상동몽(同床同夢) 오손도손 행복마을 만들기', 동남부권의 '힐링드라마을 활성화 사업', 동북부권의 '농산촌 작은 영화관 영상제작 스튜디오 사업' 등 생활권마다 필요한 '주민체감형'사업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14건)을 우선 발굴·선정하였으며,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80% 국고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25개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은, 전주-완주 버스요금 단일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센터 설치, 서남부 농기계 공동활용센터 건립, 동남부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동북부의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개발 등이 포함되었다.

108개 시·군 단독사업은, 특정 시·군의 사업이지만 주민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마을 만들기 육성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등 시·군별로 주민 생활과 밀착되는 절실한 과제위주로 발굴하였다.

전라북도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생활권 시·군간 협의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역위에 제출한 사업으로, 3월부터는 공모선정을 위해 각 부처별 사업설명 등 시·군과의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사업 선점에 온 힘을 다하고 정부 정책방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활권 중·장기 전략사업은 SOC 및 복지 분야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로 사업을 발굴하고, 3월중 전문가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번에 발굴된 생활권사업과 전략사업은 시·군이 중심인 「생활권 발전계획」과 「전라북도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14~2018)」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국가예산 확보로 독자경제권 구축 등 전북만의 특화된 발전전략을 달성할 계획이다.

2014.03.03.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실

2013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정보 활용건수 1억 건 넘어 정보 공개, 공간빅데이터 구축 등으로 정보 활용을 확대할 계획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통합 관리되고 있는 국가 공간정보의 활용건수가 작년도 처음으로 1억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정보 활용 현황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합계 | 7,123,700 | 25,400,215 | 73,370,694 | 100,584,999 |
|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 2,045,302 | 18,629,017 | 52,718,541 | 65,700,118 |
| 행정공간정보체계 | 5,078,398 | 6,771,198 | 20,652,153 | 34,884,881 |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는 국가공간정보의 범정부적 공동 활용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공간정보 공공플랫폼」으로, 2009년까지 44개 지자체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2010

년부터 첫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27개 중앙부처 78개 시스템 및 246개 지자체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서비스 중이다.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2010년도에는 활용건수가 약 7백만 건 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약 1억 건으로 약 14배 증가하였다.

정보의 활용이 증가한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간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고, 공간정보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OpenAPI 마법사⁸, 매쉬업 저작도구⁹, 25cm급 정밀항공사진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7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해 민간의 활용도가 높은 16분야 87종의 정보를 개방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¹⁰

활용된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년에 이용도가 높았던 지적도, 행정경계, 건물, 도로, 새주소 등의 기본공간정보는 각각 100만 건 이상 활용되었으며, 농업진흥구역도, 자전거도로, 도시계획도 등의 주제도 정보도 각각 5만 건 이상 활용되었다.

자치단체 업무 활용 측면에서 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축산분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농업·지역산업·보건·위생분야에서 활용건수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해 필요한 공간정보를 보다 손쉽게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

⁸ OpenAPI 마법사: 국가 공간정보의 개방, 공유, 참여를 통해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시스템

⁹ 매쉬업 저작도구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공간정보를 사용자의 공간정보와 융합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도구

¹⁰ (개방 정보) 택지정보, 도시계획, 등산로, 사업지구정보, 국가지명, 산업입지, 해안선, 하천정보, 교통CCTV, 세주소, 국가교통정보, 연안개해 취약성평가, 소방서 관할구역, 물환경정보, 보행우선구역, 농업기반시설

가치와 융·복합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 간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민간에서 이용수요가 많은 공간정보를 추가로 공개(10개 분야 109종)하고, 이 밖에도 공간정보, 행정정보, 민간정보의 융합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과학행정 구현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여 공간정보의 활용을 더욱 극대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3.04.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

광주시, 마을공동체사업 종합계획 마련키로

강운태 시장, 주민자치위원장 대표·마을전문가와 간담회

강운태 광주시장은 4일 마을공동체 사업 전문가, 주민자치위원장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마을공동체사업 종합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제1회 마을공동체사업이 주민간의 소통,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주민 상호간의 관계 증진 등 도시 속 공동체 의식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경쟁과 지속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마을리더양성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권역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개설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성과 평가와 함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등 지원해 나가는 사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당해 마을소재 기업 등의 지역사회 환원, 재능기부 등을 통한 마을공동체사업 운영 자금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강운태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1회 마을공동체사업(75개 마을)에 이어 올해 마을공동체사업에는 255개 마을이 공모에 참여해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4.03.04.

..... 광주광역시 시민협력관실

광주시, 도시경관 대대적 개선

국제도시 걸맞은 도시경관 조성... 기본계획 용역 발주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테)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을 개최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2030 광주 도시경관 기본계획 용역', 경관 취약지 개선사업, 공·폐가 정비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국제도시 광주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4억 5000만 원을 들여 '2030 광주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 이 용역은 경관 현황조사·분석, 경관권역·경관거점의 설정 등을 내용으로 오는 4월 발주한다.

도시경관이 불량한 나대지, 옹벽, 비탈면 등 단절된 공간을 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경관취약지 개선사업'도 3월 중 사업시행자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지난 2009년 시작된 경관취약지 개선사업은 그간 7억 1900만 원을 들여 운암동 광주예술고교 옹벽, 오차동 머구재 쉼터, 계림동 푸른길공원 주변, 비엔날레 정문 앞 옹벽 등 5곳에서 실시했다. 특히, 계림동 푸른길 공원주변 사업은 2012 대한민국 경관대상 대상과 2013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 편의공간조성을 위한 공·폐가 정비사업'은 지난달 12일 전수 조사를 마치고 전체 2480개 동 중 철거 및 공공 제공에 동의한 180개 동에서 우선 48개 동을 선정해 사업비 3억 8600만 원을 투입해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공·폐가 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30억 원을 투입, 337개 동을 정비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제공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국제행사와 국제경기가 열리는 행사장 주변을 중심으로 새봄맞이와 연계해 꽃밭조성, 환경정화활동 등 가로환경정비도 펼칠 계획이다.

2014.03.04.

.....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 등 신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신축을 한시적(15.12.31까지)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14.1.28 공포, 4.29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에도 현재 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허용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허용

대도시 택시업체의 상당수가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등 차고지 확보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내 허용하여 택시업체의 차고지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13.11.28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택시산업 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③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증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축 및 증축을 허용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도 증축을 허용하되, 구역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규모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 내로 제한하였다.

④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상향 조정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를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 조정한다. 그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많이 징수한 지자체에서는 징수한 금액만큼 해당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며,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으로 우선 사용토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4.03.05.

.....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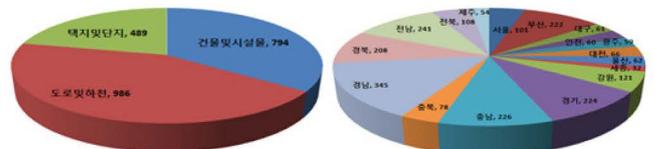
‘올해 우리 국토는 어떻게 변할까?’

지리원, '14년 국토변화예정정보 공개 및 지도수정 실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올해 완공예정인 도로, 철도, 택지 등 우리나라의 주요 변동예정정보 2,269건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가기본전자지도의 신속한 수정을 위하여 국토의 변화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¹¹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정보는 음성-충주간,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제주혁신도시 등 전국에서 추진 중인 주요공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변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하천 공사가 986건으로 가장 많고, 지역적으로는 경남지역이 34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4년 주요 국토변화 예정정보(좌:유형별 현황/우:지역별 현황)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토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지도에 반영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3년부터 국가기본전자지도 상시수정 체계를 도입하여, 전 세계 지도제작 기관 중 가장 빠른 제작 프로세스를 운영 중에 있다.¹²

특히, 올해에는 약 75개의 공공기관 이전, 인천아시안게임 등으로 인한 각종 공사가 완료될 계획에 있어 신속한 지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¹¹ 지자체,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변화정보 수집
¹² '13년 주요변동사항: 제2서해안고속도로, 세종시, 혁신도시 등 6천여건 반영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지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지도의 수정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변화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민간 지도서비스 업체(포털, 내비 등)의 업데이트도 지원할 계획이다.¹³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지형지물변동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된다.

2014.03.06.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충남 공공디자인 컨트롤타워 개소

7일 도 공무원교육원서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개소식

충남도도는 7일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도민 행복공간 조성 및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문을 여는 충남 공공디자인센터는 현재 혼재돼 있는 도와 시·군의 디자인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디자인을 통해 아름답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한 이준우 충남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 등 축하내빈과 디자인 관련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설립을 축하하고 명품 디자인 충남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충남 공공디자인센터는 앞으로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 수립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도내 민·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맞춤형 디자인 컨설팅 지원 △디자인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가운데 2014년 사업으로 도내 15개 시·군에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¹³ 민간에서 수집이 어려운 변화정보(공사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속한 민간지도 업데이트 효과 기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센터는 연내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광역적·지역적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는 센터장을 포함해 전임 책임연구원 1명과 전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등 연구원 4명을 보강하고, 디자인 분야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센터를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이현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디자인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주목받는 21세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이번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개소로 결실을 맺었다”며 “충남 공공디자인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행복한 환경조성은 물론, 도민화합과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5기 출범이후 ‘도민행복, 명품 디자인 충남’이라는 도정 목표 아래, 도청 건축도시과에 공공디자인팀을 설치하고 디자인 컨설팅 지원 및 도시 및 농·산·어촌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디자인을 통한 도민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 디자인 이미지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2014.03.06.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팀

도심재생사업으로 새로운 변화 시도

전국 선도 지역 공모 참여

그간 도시외곽 확장으로 갈수록 도심지 쇠퇴와 슬럼화의 문제가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 되면서 전북도는 앞으로 도심지 재생사업을 본격화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그간 ‘도시 활력화 증진사업’으로 전주시 한옥마을을 신 모 델화 하고 2012년부터 천사마을 가꾸기, 중앙시장가 정비, 막걸 리프로젝트 등 8개 사업에 1,323억을 투자하여 추진해 오고 있

며, 앞으로는 정부정책과 작년 12월 5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도시재생 선도 지역 공모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올해 전주, 군산, 정읍, 완주의 4개 지구 정도를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이달 3월 중에 선도 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우선 전주는 연구사업인 테스트베드(역량강화 지역접목)가 금년 3월에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한옥마을과 연계한 한국형 도시재생 완성을 위한 제2섹터를 구축한다는 목표이고, 군산은 근대문화 역사의 실증지대로 적산가옥, 근대 산업철도, 내항과 일제 강점기 최대 곡창지대 수탈 흔적의 역사배경과 국민감정 회복을 위한 관광산업 개척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며, 정읍은 노후상점가 차문화 거리등 주거지 재생화, 완주는 로컬 푸드 마을 만들기과 농촌학교 육성외의 지역특성을 살린 도심재생화 계획을 들어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 도시 활력 증진사업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주요사업 | 총사업비 | ~2013 | 2014 | 2015~ | 비고 |
|-----------|----------------------|---------|---------|-------|-------|--------------------|
| 계 | 7개 세부사업 | 130,653 | 113,454 | 7,848 | 9,351 | |
| 주거지 재생 | 천사마을가꾸기 사업 | 14,000 | 6,780 | 4,760 | 2,460 | 지역개발과 |
| | 주거환경개선사업 | 93,315 | 86,679 | 664 | 5,972 | 토지주택과 (3단계착수) |
| 중심 시가지 재생 | 중앙시장 고객소통 골목길 정비사업 | 1,200 | 600 | 600 | 0 | 지역개발과 |
| | 전주 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 | 1,800 | 1,800 | - | 0 | 차세대식품과 (13년 종료) |
| 기초생활 기반확충 | 농촌 생활환경정비 | 17,000 | 15,740 | 1,260 | 0 | 토지주택과 |
| 지역 역량 강화 | 전년전주 명품 온브랜드화 사업 | 2,738 | 1,655 | 364 | 719 | 지역개발과 |
| | 동동동 마을재생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 600 | 200 | 200 | 200 | |

도시재생사업은 정부가 금년 최초로 전국 11개 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3월 중에 실시하여 5월 중에 확정 할 계획이며 선정될 경우에는 지구당 200~1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한다.

전라북도에서는 “도내에 다수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한 신청지구 컨설팅 등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선정과정에서 행정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4.03.06.

전라북도 지역개발과

인천 개항 창조문화도시(MWM City) 경제기반 구축 업무협약 체결

MWM City 사업추진 위해 인천시·인천본부세관·인천항만공사 상호 협력

인천시는 3월 7일 인천시청에서 송영길 인천시장,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 최해섭 인천항만공사 운영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개항 창조문화도시(MWM City)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시재생 선도 지역(MWM City)내에서 사업추진주체 및 지원역할을 수행하게 될 인천시와 인천본부세관, 인천항만공사가 향후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는 인천 개항 창조문화도시(MWM City) 도시경제기반 활성화 사업구상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인천본부세관은 관세청소유 세관창고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세관역사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며, 인천항만공사는 공사가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과 항만운영사 기능 및 항운근로자 고용 재배치 업무에 협력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과 관련한 세부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주요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최근 정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확정과 함께 도시재생선도지역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지정계획 공모에 따라 인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지닌 중·동구 일원 총규모 2.6km² 면적에 개항장, 차이나타운, 누들 지역 등의 역사문화자원과 내항1,8부두 재개발 및 동인천역 주변 중심시가 지재생을 연계하는 「인천 개항 창조문화도시(MWM City) 경제기반형 활성화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며,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 건청취 등 법정 사전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시에서는 현재 타 시·도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인천의 차별성을 내세운 「인천 개항 창조문화도시(MWM City)」 경제기반형 선도 지역 사업구상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오는 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2014.03.07.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서울시, 지속가능 '마을기업' 본격 지원... 65개 선정

마을기업 65개 선정, 사업비(35개)·공간임대보증금(30개) 등 30억 7200만 원(국비 포함) 지원

서울시가 올 한해 총 65개의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을 선정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마을기업 성공모델로 육성한다.

서울시는 올 한해 사업비지원 35곳, 공간임대보증금지원 30곳 등 총 65곳의 마을기업에 총 30억 7200만 원(국비포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사업성이 높은 마을기업과 청년층과 기술을 보유한 은퇴노년층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중점적으로 선발하고, 청년층과 은퇴자 등 지역 내 전통기술 및 고부가가치 기술 인력을 활용하는 '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을 신규 마을기업유형으로 추가해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35개 내외 업체에 총 10억 7200만 원, 업체당 최대 8천만 원까지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마을기업 및 마을공동체는 4월 21일(월)~25일(금)까지 해당자치구 마을기업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신청 전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 지원센터 마을기업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씨앗기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공간임대보증금'은 총 30개 업체에 총 2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며 최대 8천만 원의 공간임대보증금을 5년간 지원한다.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 공모부터는 자부담 10%를 도입해 마을기업 지원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기존의 창업 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운영방법 등의 교육은 물론 건설한 마을기업을 육성해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신청 전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교육과정에 심화교육을 추가하고, 신청단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사업모델을 정의하고 세부사업방향을 검토하는 팀 워크숍을 4회로 늘려 시행한다.

그리고 창업이후에는 법률, 세무, 회계, 홍보 등 기업 실무에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 상시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지속가능성과 사업성이 높은 마을 기업을 선발해 빈틈없는 사후지원을 통해 지속적 생존율을 대폭 높일 계획"이라며 이를 통한 청년, 베이비부머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14.03.11.

..... 서울특별시 사회경제과

지역밀착형 창조일자리 프로젝트 도시재생

마을전문가에 도전하세요!

부산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재생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지역밀착형 창조일자리 프로젝트' 시행

부산시는 오는 12월까지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 주민들의 자립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재생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창조 일자리 프로젝트(이하 창조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조일자리 프로젝트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¹⁴의 일환으로 부산시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다.

구직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은퇴 베이비부머 및 청년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마을전문가양성사업(마을전문가과정, 퍼실리테이터과정)과 도시재생전문인력사업(창조도시여행전문가과정, 창조마을 아키텍처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마을전문가과정은 지역주민을 마을전문가로 키워내 사회 재진입의 기회를 늘리고 마을전문가 양성 및 마을맞춤 협동조합형 창업아이템을 발굴해 실제 창업으로 이끄는 프로그램이다. 3월 21일까지 2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며, 교육은 4월 2일부터 9월 18일까지 주 2회 실시된다. 교육생 가운데 협동조합형 창업에 정자는 분야별 전문컨설팅과 홍보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퍼실리테이터과정은 집단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능동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양성 프로그램이다. 3월 21일까지 15명의 교육생을 모집하며, 교육은 4월 3일부터 9월 19일까지 주 1회 실시된다.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을 위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을 받게 된다.

창조도시여행전문가과정은 체험위주 관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재생 지구를 대상으로 체험중심의 다양한 여행코스개발 및 상품개발을 위한 관광 전문 인력 양성과정이다. 관광기획 및 관련 전문 업무숙지, 실무능력강화를 강조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CRS(컴퓨터예약시스템) 관련 자격증 획득을 포함하고 있다. 5월 중으로 20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6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¹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 지자체가 민간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용노동부에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선정결과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매칭 투입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주 5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창조마을아키텍처과정은 부산 내 도시재생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창조 콘셉트를 적용하는 건축 및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의 실질적 재생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마을재생 전문 아키텍처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5월 중으로 15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7월 7일부터 8월 1일까지 주 5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수료생 전원에게 관련업계 현장실무자와의 1:1 멘토링과 현장맞춤형 실습교육 기회가 제공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창조일자리 프로젝트 관련 교육은 전액 무료로 실시되며, 각 분야 교육 이수 후에는 해당업종에 맞춰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한다."라면서, "이번 사업을 통한 도시재생전문인력 양적으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과 도시서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2014.03.11.

.....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지역발전 거점으로 20개 중추도시권을 육성하고, 도시첨단산단 3곳, 노후 산단 재정비 지역 6곳을 선정 GB 등의 규제완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투자선도지구」도 도입

국토교통부는 3.12(수)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시·군 행복생활권 구현, 시·도 특화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기업 인센티브,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기존 거점개발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패키지형태로 맞춤형 지원하기로 하였다.

오늘 발표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중 국토교통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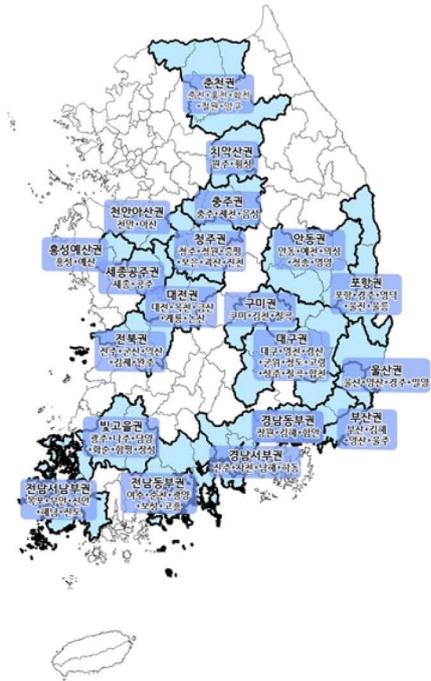


그 외 지역 도시재생, 도심지 주차난 해소 등 지역발전을 위해 각종 개선사항을 마련하였고, 혁신도시 활성화, 기업도시 개발촉진, 세종시 지속기능 강화 등 기존 지역의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통해 지역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14.03.12.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전국 중추도시권 구성 현황도

도내 6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경원축, 평안, 동북부, 한탄강, 인천시 시범생활권, 수도권 동북부시범권의 6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경기도는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 동북부 등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역발전 정책기조를 기존 광역단위(5+2 광역경제권) 지원 방식에서 실질적인 생활권 단위로 변경하고,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지역행복 생활권 단위로 발굴하면 국가에서 지원하고자 그동안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생활권 구성과 각종 사업을 발굴해 왔다.

경기도는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위해 지난 1월 해당 자치단체장 MOU를 체결하고, △경원축(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평안(평택, 안성) △동북부(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한탄강(포천, 연천, 철원군) 생활권 구성(안)을 마련, 지역위에 제출하여 생활권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끌어 냈다. 또한, 도내 부천시 는 △인천시 시범생활권에 포함됐으며, 남양주시는 서울시가 제안한 △수도권 동북부 시범 권에 포함돼 경기도에서는 최종적으로 6개 생활권이 구성·운영되며, 앞으로 생활권별로 필요한 각종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전략의 일환으로,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이하 중추도시권) 구성을 부산, 대구, 대전, 세종 등 광역시·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6개 권역, 인구 50만 명 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 도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14개 권역으로 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도시첨단산단’, ‘지역특화산단’, ‘노후 산단 재생’ 등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육성한다.

지역투자에 장애가 되는 당면 애로 및 규제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용도제한, 개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민간공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한편,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에 따라 시·군간 연계·협력 사업을 비롯한 각 생활권에서 그동안 발굴된 사업 130건(총 사업비 1조 5,834억원)은 각 부처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관계부처 검토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5월 중 정부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도해 나갈 예정이다.

2014.03.12.
경기도 지역발전정책팀

2014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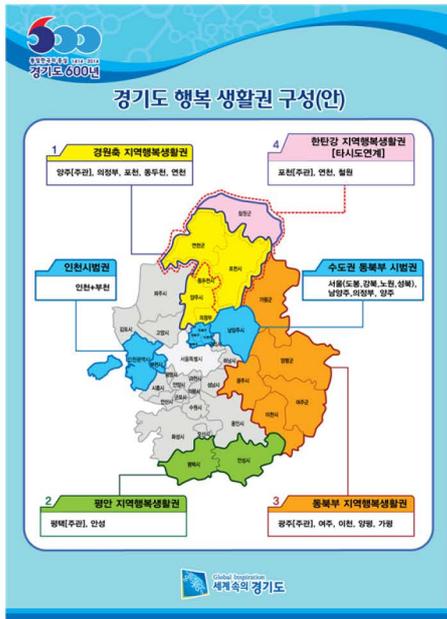
충청북도가 도시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생활수준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까지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공공디자인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낙후된 마을의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함께 어울려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9억 원(도비 2.7, 시군비 6.3)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3개소(진천 내구마을, 괴산 황암마을, 구만동천마을)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의 상징성을 특화하거나 역사적 문화적 자원에 공공디자인을 접목하는 사회문화적·공간적 재생사업으로, 풍경이 아름다운 마을로 바꾸어 귀농·귀촌 및 관광자원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14년도 사업공모에 12개 마을이 응모하는 등 도민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았던 만큼 이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청북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2014.03.12.
충청북도 공보관



■ 경기도 행복 생활권 구성(안)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 중심으로 시·도별 1건씩 추진되는 특화발전 프로젝트 사업에는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이 후보군에 선정돼, 연천과 김포 등 낙후지역인 경기북부 지역에 국가안보와 연계된 대규모 관광지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도는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에 따라 발굴된 130여개의 각종 사업이 정부지원대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 관계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도는 생활권 구성 확대와 도민 체감형 각종 새로운 사업발굴을 위해 20인 이내로 구성되는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유

광주시,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 지역 사업’ 응모 동명동·산수동 등 원도심 활성화

광주광역시시는 원도심인 충장동, 동명동, 산수동, 지산동 일원을 대상으로 동구에서 제출한 ‘새롭게, 낮익게, 깨비동 문화동구’사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업을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선도 지역 공모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신청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광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중심지인 원도심으로 푸른길로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문화전당과 함께하는 상가활성화를 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갈마촌 예술마을, 나무전거리 아트스트리트, 푸른길 문화광장, 남도음식거리 등 마을만들기사업 △깨비동하우스, 푸른길아트공방, 충오창의단지 등의 일자리만들기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동명 근대양옥마을 답사길, 문화전당 카페공방거리, 충장로 청춘극장 등 지역문화만들기사업이다.

마을 만들기를 통한 물리적 재생과 일자리 만들기 차원의 경제적 재생, 지역문화를 활용한 사회적 재생이 상호 선순환하면서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은 올해 평가를 거쳐 4월말 지정되면 향후 4년간에 걸쳐 200억 원(국비1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되면 도시재생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며 “지역을 대표해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선도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2014.03.13.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제도 개선 등 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3.20)

국토교통부는 '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3월 20일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¹⁵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이 원

¹⁵ (현행)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 가능 - 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하여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4.03.19.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행복하고 희망을 나누는 마을 만들기 단계별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운영으로 체계적 마을활동가 양성·관리

부산시는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상생의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2014년 상반기 마을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주관하며,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I, II, III)으로 구분해 4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기초과정은 마을주민, 마을활동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마을 만들기 의 이해, 마을활동가의 역할 등 마을활동을 위한 기초내용 들로 구성된다. 심화과정은 기초과정 수료자, 마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과정, 커뮤니티 디자인 과정, 퍼실리테이션 과정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단계별 교육 수료 사항에 따라 마을활동가 인증서가 교부되며, 부산시 마을활동가 모집 시 인센티브 부여, 각종 교육 및 워크숍, 답사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양성된 마을활동가는 마을현장에 투입돼 행정과 주민 간 매개역할을 담당하며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지역의제 발굴, 마을 기업 설립 등 다양한 마을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2014.03.14.
.....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충청남도, '광역도시계획 수립 주민의견 묻는다' 내포신도시권·공주역세권 주민협의회 11개 시·군 순회 개최

충청남도는 14일부터 21일까지 내포신도시권 및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주민협의회를 도내 11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13일 도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 주민협의회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계획권에 포함된 11개 시·군에서 추천된 지역 주민 5인과 총괄계획가, 시·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주민협의회는 광역계획권 지정 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로, 그동안 해당 시·군에 대한 기초조사 완료 후 작성된 광역계획권 설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광역계획권 설정안에 따르면 내포신도시권은 홍성, 예산을 포함해 보령, 서산, 당진, 태안 등 6개 시·군을 포함하며, 공주역세권은 공주, 논산, 계룡, 부여, 청양 등 5개 시·군을 아우르고 있다.

도는 이번 11개 시·군 순회 주민협의회의 제안을 포함해 온·오프라인 주민의식 설문조사와 충남넷을 활용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보다 많은 주민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통해 올해 7월 중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내년 10월까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4.03.14.
.....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2014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마을 육성사업 선정 한림읍 월림리 등 예비마을 11개마을과 남원읍 태흥2리 등 추진마을 3개 마을 선정

제주자치도는 도민 주도형 상향식 마을만들기를 위한 제주형 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뮤니티비즈니스 마을 육성사업 공모결과 응모한 20개 마을에 대하여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벌여 14개 마을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마을에 대한 지원은 1단계 예비마을로 선정된 11개 마을¹⁶의 의제발굴과 자원조사, 주민교육 및 학습, 벤치마킹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비용으로 마을별 9백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하게 된다.

3단계 추진마을로 선정된 3개 마을¹⁷은 마을별로 중규모의 소득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데 1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3월 중으로 세부사업계획서 및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접수받아 교부결정하고 4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11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만들기 5단계 행정지원시스템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비마을에 선정되지 아니한 마을에 대하여도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아 발전과제를 도출하고, 2014년 주민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여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워크숍 컨설팅 자문단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진단 및 전문가 매칭 지원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농교류 인적역량강화 도외교육과정 참가자에게는 왕복 항공료 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회가 주체가 되어 마을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와 주민소득 창출을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살만한 마을, 활력있는 마을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도부터 도입한 “마을만들기 5단계 행정지원시스템”을 적용하여 단계별로 공모사업을 벌여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4.03.19.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¹⁶ 한림읍(월림리, 대림리), 애월읍(곽지리, 고성1리), 조천읍(북촌리), 한경면(조수1리), 대정읍(영락리), 성산읍(신양리), 안덕면(덕수리), 표선면(토산1리), 영천동(도평마을)

¹⁷ 남원읍(태흥2리), 표선면(세화3리), 한림읍(상명리)

부산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4.1.14.)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시행(14.1.14.)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법정상한 300%)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

부산시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재개발구역에 한해 기존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기준 용적률을 기존보다 일괄 1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용적률 상향은 그동안 주택재개발사업의 침체에 따른 사업 지연, 주거환경 악화, 폐·공가 증가, 주민간 갈등 심화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부산시의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시는 건축심의 기준상 지상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 있어,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과도한 비용이 소요돼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주택재개발 사업장의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지역 여건에 따라 지상주차장 설치를 허용토록 건축 심의시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정비구역 내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CCTV, 가로등 설치, 경사로 정비와 폐가 철거, 공가(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민교육 추진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사업성이 개선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신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용적률 상향 조정안

| 구분 | 기존 기준용적률(%) | 변경 기준용적률(%) |
|--------|-------------|-------------|
| 경관관리구역 | 210 | 220 |
| 주거관리구역 | 220 | 230 |
| 주거정비구역 | 240 | 250 |
| 개발유도구역 | 260 | 270 |

2014.03.20.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담당관실

행복주택 공사장 가림막, 지역주민이 디자인 결정

가좌지구 가림막 디자인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는 금년 상반기 첫 삽을 뜨는 행복주택 가좌지구의 공사장 가림막(fence) 디자인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주민이 직접 가림막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은 LH가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는 가좌지구가 처음이다.

가좌지구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가좌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만큼, 지역사회가 선호하는 디자인 적용을 통해 주변 미관과 조화로운 사업현장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좌지구의 개발 콘셉트에 어울리는 기본 디자인(안)을 마련하고,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의선 가좌역 등에서 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가좌지구가 ‘대학생 특화지구’로 조성되는 만큼, 주로 젊고 활력 있는 모습을 이미지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6개의 도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주민이 선택한 디자인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6가지 디자인(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젊고 활기찬 에너지를 주변으로 퍼지게 한다는 기본 테마에 맞춰, ‘활력’, ‘확산’, ‘어울림’에 부합하는 문양과 색상을 각각 적용하였다.

의견수렴은 가좌역 일대에서 실시하는 스티커 투표를 통해 진행되며, 선정된 디자인을 적용한 펜스는 4월 중순경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는 앞으로도 행복주택 단지의 세세한 부분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여건에 맞는 행복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젊고 활력 있는 가좌지구 기본 테마



2014.03.23.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민간이 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게 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부족한 지방 재정 등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인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4일부터 40일간 (3.24~5.7) 입법예고 한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기부 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제공한 면적 외에 그 만큼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4.03.23.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경북의 정체성 담은 건축 환경 조성한다

경북도는 건축물과 도시경관의 품격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인 광역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을 위해 「경북만의 건축문화 창달, 대한민국 문화융성 주역으로!」라는 비전 아래 경북도 23개 시·군 전체를 대상(면적 1만9천28km²)으로 단기적으로 2014~2018년까지 5년간, 중장기적으로는 2014년~2023년까지 10년간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건축문화진흥을 위해 미래지향의 건축산업 육성, 우수한 건축문화자산의 사회적 확산, 효율적인 건축제도로 쾌적하고 아름

다운 경북 등을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12개의 전략과 35개 정책과제로 세분화해 실현성을 높였다.

미래지향의 건축산업 육성과 관련, 건축·도시 분야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융합하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및 탄소배출 관리시스템을 적극 도입한다. 이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소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그린리모델링 건축 및 미래성장형 U-city 건축산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건축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한옥 등 전통문화유산의 활용으로 건축문화유산을 세계적인 관광자원화 할 방침이다. 우수한 건축문화자산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는 우수한 건축가의 지속적인 발굴 및 육성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한, 건축전반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건축문화정보 지도 제작사업도 병행해 지역특성과 테마를 갖춘 관광정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건축제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도시 디자인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기준’을 마련해 건축 환경의 수준을 제고할 건축디자인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그리고 민·관·학·연 협치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 강화와 공공건축의 품격·가치 향상 방안 마련에도 힘을 계획이다.

이재춘 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경북의 정체성을 담은 중장기적인 건축기본정책 마스터플랜이 마련됨에 따라 도민이 공감하고 경북다운 건축문화 정착이 구체화 될 것”이라며 “이번 기본계획 수립으로 미래의 경북 건축문화 발전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4.03.24.

..... 경상북도 도시정책과

우리 마을은 D11우리가 D8! 부산시, 산복도로에 국내 최초 방재(防災)공원 조성

산복도로 르네상스 3차년도 사업구역인 범천2지구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방재공원' 국내 최초 조성

부산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산복도로르네상스 3차년도 사업 일환으로 범천2지구 마을에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단이 운영하는 '방재(防災)공원'이 국내 최초로 조성될 전망이다.

방재공원은 좁은 골목길과 경사길로 형성된 고지대 마을에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방재활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슬레이트주택 등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마을에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자율소방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아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시는 지난 2월 방재공원 조성 부지를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매입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 4월 공사를 발주해 6월 중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원은 안창마을 입구(신천대로 156)에 있는 유희 공지에 조성되며, 공원 명칭은 이 지역 지명 유래인 '호천(虎川)방재공원'으로 할 예정이다.

방재공원에는 소화전과 소화활동에 필요한 비상 소화장치함을 갖춰 비상시에는 방재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평상시에는 인근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활동을 위한 파고라 등 조경시설을 갖춘 포켓공원으로 활용된다.

방재공원은 지진, 해일 등 대형 재난이 잦은 일본에는 여러 곳에 조성돼 있으나, 산복도로 범천2지구의 사례처럼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직접 소방단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까지 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범천2지구 주민협의회 회원과 동참을 원하는 인근주민들

의 지원을 받아 가칭 '호천방재공원 자율소방단'을 구성하게 되며, 자율소방단이 갖춰야할 기본적 소양과 방재활동에 필요한 제반 기술교육 등은 관할 부산진소방서에서 맡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이 4년차를 맞는 동안 주민제안사업으로 방재공원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직접 자율소방단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라면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그동안 참여한 주민들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탄생한 새로운 마을재생 기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4.03.25.

.....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행복주택 입주자, 지자체가 지역맞춤형으로 우선 선정

3.26 행복주택 공급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선발방법 등 공급기준(안)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26일(수)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주요 입주 대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공급기준을 검토하면서 젊은 층에게 사회적 도약의 주 거사다리를 제공함으로써 당초의 정책취지를 달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공급기준(안)으로 제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층 별 공급비율은 작년 12.3 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젊은계층이 80%, 취약계층 및 노인가구가 20%이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등 기존 거주민이 있는 곳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산업 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최대 80%까지 공급하며, 젊은 계층 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공급 비율은 지역 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등 입지 및 단지 특성에 따라 공급비율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기본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대학생은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대학 재학생,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직장인,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 부부이다.

단, 사업지 인근 지역¹⁸의 대학에 재학하거나 직장에 재직하여야 하며, 대학생은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공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다고 해도 청약통장은 유효하므로, 이후에도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입주자 순환 및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최대 거주기간을 정하였으며, 대학생은 최대 4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각각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체 물량의 20%를 차지하는 취약계층 및 노인가구는 최대 20년 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급기준이 아직 수립 과정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26일 토론회 후에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이르면 오는 6월에 기준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3.25.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¹⁸ 해당 주택건설지역 및 연결 지역, 지역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공원, 주택가 '범죄예방디자인' 서울 전역으로 확대

주민 50% 이상이 맞벌이 가정이라 홀로 집을 지키는 아이들이 많고 비탈진 좁은 골목 때문에 교통·주차 문제는 물론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도 어려웠던 서대문구 홍은1동.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해 생활안전을 개선하면서, 주민들이 아이들을 자발적으로 돌볼 수 있는 동네사랑방이 새로 생겼고, 비탈길엔 비상벨을 갖춘 의자 형태의 이색정류장이 생기는 등 안전한 마을로 바뀌었다.

서초구 양재 시민의 숲 역시 범죄예방디자인을 도입, CCTV, 비상벨, 비상등, 사이렌, 출입구 안내표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이를 다시 구 관제센터와도 연결하는 '안전등대시스템'을 신설해 밤에도 잠들지 않는 안전한 숲으로 바뀌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2년 마포구 염리동과 강서구 공진중학교 두 곳에 적용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바 있는 범죄예방디자인을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사업과 연계해 시내 10개 지역으로 확산한다고 27일(목) 밝혔다.

확산 방식은 염리동과 공진중의 범죄예방디자인 도입을 담당했던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사업을 원하는 실국본부에 컨설팅을 해주고, 사업부서에서 실행하는 식이다.

홍은1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도시안전실), 근린공원 시범공원 조성 사업, 주민참여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공사(푸른도시국), 주거환경관리사업(주택정책실) 등과 연계했다.

서울시는 10곳 중 현재 홍은1동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안전마을 만들기를 완료했으며, 범죄예방 시범공원인 양재시민의 숲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대림동, 도봉동, 휘경동, 정릉동에서 추진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등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환경을 분석하고 주민의 니즈를 파악해

디자인을 발굴, 발전시키는 범죄예방디자인 컨설팅을 실시했다.

유보화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이번 기획설계 및 컨설팅 사업은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 서울시 실·국·본부가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협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디자인의 역할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며 “범죄예방디자인 1호 골목인 마포구 염리동과 기획설계 및 컨설팅 대상지인 홍은1동과 시민의 숲, 현재 추진 중인 관악구 행운동, 용산구 용산2가동, 중랑구 면목동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예방디자인의 기준원칙과 시범사업의 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올 연말까지 제작·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3.26.

.....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도시안전과, 녹원복지정책과, 주거환경과

정부기관, 공간정보 활용 더 쉬워진다!

무상으로 공급받은 공간정보에 대한 자율 관리 가능해져

정부기관이 공간정보를 무상공급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5일(최장 30일)에서 약 3일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부기관이 무상공급 받은 공간정보를 자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14.3.27(목)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정부예산 중 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무상공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무상 공급한 공간정보의 재배포나 자율적 사용이 제한됨으로써,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기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매번 신청서를 제출하고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자료를 직접 수령해야 하는 등 행정 처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동일한 기관 내에서 지역개발사업, 연구지원 등 목적을 달리하여

공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사용에 다소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공급 자료를 자율관리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공간정보를 무상공급 받은 기관이 해당 시군구, 소속기관 등에 재배포하거나 기관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공간정보 무상공급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이 약 10일 이상 단축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고, 무상 공급 자료의 자율관리로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자율관리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간정보 관리방안, 재배포 내역 통보, 보안사항 준수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공간정보 무상공급 대상기관인 중앙행정 소속기관의 범위를 정부 조직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등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립병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홍수통제소 등에서도 각종 시설물의 부지설정 등의 각종 의사결정과 연구 개발 등에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한 「정부 3.0」 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공간정보 무상공급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4.03.26.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르완다 등 개도국 인프라 개발 종합계획 수립 지원

신도시·교통·물 분야 국토부 50억 원 예산지원 우리 기업 수주 확대 기대

우리나라가 ‘르완다 공항부지 개발’, ‘칠레 토지정보 인프라’, ‘모잠비크 간선도로망’, ‘니카라과 국가도로망’, ‘태국 동부연안 물관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리', '인도네시아 페칸baru 상수도', '베트남 후에 도시교통' 등 개발도상국의 주요 인프라 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해준다.

국토교통부는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전략'의 일환인 인프라개발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지원 대상사업 7건을 3월 24일 해외건설진흥위원회¹⁹ 심의를 통해 선정했다.

국토부의 예산지원을 통한 개도국 인프라 개발 종합계획 수립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며 작년(3건)의 2배 이상인 7건을 수립함으로써 양적으로 확대됨은 물론, 국제기구 공동사업²⁰도 새로 추진하는 등 질적인 향상도 있어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사업은 해외건설에 관심 있는 일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총 52건 접수)를 바탕으로 신 시장 개척, 전후방 연계효과(Linkage Effect), 우리나라 강점 분야 및 우리 기업 수주 가능성 등을 토대로 해외건설 전문가²¹들이 심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우리 기업이 국내외 사업경험을 통해 이미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신도시, 수자원, 교통 분야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개도국에서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에 적은 7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4월 중에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대상 국가에 제공한 이후에도 후속 사업 발굴 및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을 위해 대상 국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2014.03.27.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개발협력팀

¹⁹ 국토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재부 등 11개 부처 고위직공무원, 해외건설에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

²⁰ 올해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베트남 후에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후속 차관사업 등에 우리기업 진출 활성화 추진

²¹ 국토부, KOICA, KDI,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학계 전문가 등

닫혀있던 북한지도, 일반에 모습 드러내

북한지도(지형도, 위성지도, 수치지형도) 3.28.부터 공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원은 그간 대북 관련 국가기관에만 제공하던 북한 지역의 지형도, 위성지도, 수치지형도를 민간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북한지도(지형도, 위성지도, 수치지형도)는 '07~'09년 제작된 1/25,000 및 1/50,000 축적으로 북한의 국토 현황은 물론 건물·도로·철도 등 최근 도시발전 모습까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전역의 위성지도와 지형도를 한권의 책으로 묶은 “북한 지도집”을 발간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pdf)형태로 서비스 한다.

그간, 북한 지도는 남·북한 경제협력이나 통일에 대비한 중요한 정책 자료로 대북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만 제공되어 왔으나,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민간기업의 대북 경제협력과 통일 연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북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수정·갱신하여 국민에게 최신의 북한 국토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통일에 대비해 앞으로 북한의 주요 도심지역까지 확대한 상세지도(1/5,000 축척 등)를 제작할 방침이다.

2014.03.27.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

울산시, 울산다운 건축문화 마련

오는 4월부터 울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울산다운 건축문화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오는 4월부터 건축·도시정책 중·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울산다운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울산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용역에서 울산시는 도시, 사회, 역사, 문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걸맞은 울산 고유의 개성과 문화가 함께 아우러진 건축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의 생활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공공성 확보와 창의적 건축디자인을 창출하여 건축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4월부터 울산발전연구원과 함께 건축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자문회의(내년 1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건축정책 위원회의 심의(내년 6월) 등을 거쳐 내년 7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건축기본계획수립 범위는 울산광역시 전역(1,057km²)을 대상으로, 용역 기간은 내년 7월까지 진행된다, 용역비는 1억 2,000만 원이 투입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울산시의 건축물과 건축 주변 공간 환경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울산의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역건축기본계획’은 시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광역차원의 발전전략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14.03.28.
.....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대구시, ‘도시계획’을 시민과 함께 그린다!

‘도시계획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마련, 공감과 사회적 합의도출

대구시(시장 김범일)는 올해를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의 원

년’으로 삼고자 현행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제도의 실태를 진단·분석하여 진정한 주민참여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계획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주민참여제도는 198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주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공청회·열람)가 처음으로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 다소 형식적·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전문가가 만드는 도시에서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고, 참여과정도 민주화하여 바람직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입안과정 주민참여 확대’, ‘홍보방법 다양화’, ‘주민역량 강화’ 등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누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도시계획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우선 지침 성격으로 운영한 뒤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는 등 제도화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 1월,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시민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발굴하여 계획에 접목하고자 시행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에 이어 이번 ‘도시계획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도시계획은 대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고 원칙이 되는 만큼 우리 대구시가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시민들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민과 함께 꿈꾸고 그리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4.03.28.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행복도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방식 개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복도시에는 예정지역의 불법현수막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BRT(간선급행버스체계)도로변을 중심으로 7개소의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가 신축 등에 따른 광고수요에 대응하여 게시대 운영방식을 변경기로 했다.

그동안 운영방식은 지역제한 없이 월 1회 게시할 현수막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 한 업소에서 최대 5개까지 설치하는 등 문 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예정지역에 입점했거나 입점이 예정된 업소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최대 2개까지), 잔여 게시대가 있을 경우 타 지역 업소에 개방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건축과나 세종시 옥외광고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2014.03.2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과

하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다!

국토부,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사례집」 발간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하천정비 사례를 확산·보급하고 바람직한 하천 정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사례집」을 발간한다.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사업이란, 하천의 치수와 이수 기능을 고려함과 동시에 하천 환경의 보전, 재생 및 복원을 고려한 하천사업

으로, 국토부는 1998년도 오산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다.

사례집은 그동안 추진한 하천정비 사례 중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 전후 및 공사 중의 사진을 대비하거나,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례집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3월31일부터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게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에 배포하여 하천정비 업무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요한 여가 및 생활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하천을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공존하는 조화로운 공간으로 바꾸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사례집

2014.03.31.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김중업 박물관

Kim Chung Up Museum



지난 3월 28일 '김중업 박물관'이 개관했다. '김중업 박물관'은 안양예술공원 초입에 위치한 건물로 근대건축의 거장故 김중업 선생이 1959년에 설계한 유유산업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만들었다. 유유산업 공장 건물들은故 김중업 선생의 초기작으로, 모서리마다 조각작품이 장식되어 있고 구조체가 밖으로 드러난 형태로 디자인 되어 있거나, 건물 계단의 기둥들이 '유유(YUYU)산업'의 Y자 모양으로 형상화 되어 있는 등故 김중업 선생 특유의 독특한 맛을 자랑하고 있다.

'김중업 박물관'의 부지 또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부지 내에는 보물 제4호로 지정된 증초사지 당간지주와 고려시대 삼층석탑이 자리하고 있으며, 안양(安養)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고려시대 사찰 안양사(安養寺)의 명문기가 출토되어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

2007년 유유산업이 제천으로 이전하면서 공장 건물의 문화적·예술적·역사적 가치를 알게 된 안양시는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故 김중업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김중업 박물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김중업 박물관'은 「김중업관」, 「안양사지관」, 「문화누리관」,



「어울마당」, 「문화지킴소(경비동)」 등 5개 동으로 나뉘어 있다. 개관전으로 6월 8일(일)까지 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전시(APAP)가 진행되며, 전시는 국내외 현대예술 작가들을 안양으로 초대해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예술의 공공적 가치와 안양의 내적 자산을 재발견하는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의 현대 미술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글·사진▷ 이경신 (김중업박물관 & '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소개 글 참고)

건축정책 및 우수건축물 정보를 한눈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 관련 통합정보 서비스 개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는 국내 우수건축물 및 건축·도시 관련 정책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우름(www.aurum.re.kr)’ 시스템을 구축하여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우름(AURUM) 홈페이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도시정책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정책수립 및 홍보를 지원하고, 국내 주요 건축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서비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아우름은 △정책동향, △건축INFO, △건축문화자산, △설계경기, △인물·조직, △연구동향 등 6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한다.

정책동향 정보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생산·배포되는 건축·도시 관련 보도자료 및 각종 제도, 지침 등 정책정보를 제공하여 최근 정책 이슈 및 동향을 살펴볼 수 있으며,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인포그래픽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건축문화자산 정보는 2,400여건의 국내 주요 건축상* 수상작 및 우수 공공공간 정보를 구축하여 국내의 주요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 △한국건축문화대상, △한국건축전, △한국건축가협회상, △김수근건축상, △서울특별시건축상, △젊은건축가상, △대한민국공공건축상, △대한민국경관대상, △대한민국신인건축사대상, △대한민국녹색건축대전, △대한민국한옥공모전, △부산다온건축상

특히, 건축문화자산 정보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지역별, 용도별 맞춤 검색이 가능하며, 관련 설계자 및 설계사무소 정보와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앞으로 아우름 시스템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건축정책수립 및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우름 메인화면



건축문화자산 메뉴화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도시 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 건축자산 DB를 구축·서비스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건축 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31-90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동 706-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B 706-1, 230 Simin-dae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431-908, Korea

(aur_i) 건축도시공간연구소